
2006 정기감사결과처분요구서

〈 부 평 구 〉

인 천 광 역 시

■ 처분요구서 총괄표

제 목	구 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총 액	회수· 추징	감액· 재시공	기타
합 계	77	(6)	77	38	38	1	11/1,277,720	10/1,275,010	-	1/2,710
인사조직	6	-	6	2	4	-	2/11,820	2/11,820	-	-
예산회계	10	-	10	3	7	-	-	-	-	-
지역경제	4	-	4	3	1	-	-	-	-	-
사회복지	3	-	3	3	-	-	1/7,486	1/7,486	-	-
보건환경	8	-	8	1	6	1	-	-	-	-
지 방 세	2	(4)	2	2	-	-	2/829,441 (4/100,472)	2/829,441 (4/100,472)	-	-
전산통신	4	(1)	4	1	3	-	-	-	-	-
건설행정	2	-	2	-	2	-	-	-	-	-
문화공보	1	-	1	-	1	-	-	-	-	-
세외수입	3	-	3	2	1	-	1/4,887	1/4,887	-	-
재산관리	4	-	4	3	1	-	1/18,742	1/18,742	-	-
도시정비	2	-	2	-	2	-	-	-	-	-
토목건설	14	(1)	14	6	8	-	4/405,344	3/402,634	-	1/2,710
주택건설	7	-	7	6	1	-	-	-	-	-
토지지적	7	-	7	6	1	-	-	-	-	-

■ 처분요구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인사조직분야 - 6건 〉				
1	불문경고 처분자 서면경고 조치 미이행	□□□과	주의	9
2	지방임업9급 제한경쟁특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과	주의	11
3	모범공무원 포상업무 추진 부적정	□□□과	시정	13
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과	시정	15
5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에 따른 부당급여 수령자 사후관리	□□□실 (0000공단)	주의	17
6	2003년 제3회 직원공개제한경쟁 특별채용 부적정	□□□실 (0000공단)	주의	19
〈 예산회계분야 - 10건 〉				
7	쓰레기봉투 제조 및 동판 관리 소홀	□□□과	시정	23
8	수익계약 집행 부적정	□□□과	주의	26
9	입찰 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과	주의	29
10	등산로 정비공사 제한경쟁 입찰 부적정	□□□과	주의	31
11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소홀	□□□과	주의	34
12	하도급 계약 관리 소홀	□□□과	주의	36
13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	□□□과	주의	38
14	일시사역인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 부적정	□□□과	주의	41
15	시설부대비 집행 및 예산편성 부적정	□□□실	주의	44
1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 부적정	□□□과	주의	47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지역경제분야 - 4건 〉				
17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사후조치 소홀	□□□과	주의	50
18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 소홀	□□□과	시정	51
19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차량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52
20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말소등록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과	시정	53
〈 사회복지분야 - 3건 〉				
21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과	시정	55
22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지도·감독 소홀	□□□과	시정	57
23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후조치 소홀	□□□과	시정	65
〈 보건환경분야 - 8건 〉				
24	○○○○센터 위탁·관리 부적정	□□□소	주의	68
25	모자보건 약품등 구매 부적정	□□□소	주의	72
26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74
27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정	□□□과	주의	77
28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등 구매 부적정	□□□과	시정	79
29	방치폐기물 처리 부적정	□□□과	주의	83
30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과	개선	87
31	특정공사장 관리 부적정	□□□과	주의	91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지방세분야 - 2건 〉				
32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부적정	□□□과	시정	97
33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소홀	□□□과	시정	100
현지 처분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과	시정	-
〃	사업소세 과세 소홀	□□□과	시정	-
〃	주민세 특별징수분 과세 소홀	□□□과	시정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 소홀	□□□과	시정	-
〈 전산·통신분야 - 4건 〉				
34	인터넷 회선 사용료 지출 부적정	□□□과	주의	103
35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사업 준공지연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갱신 관련 업무추진 미실시	□□□실	주의	114
36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소홀 및 유지보수비 지출 부적정	□□□과	주의	116
37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실	시정	118
현지 처분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 관련 등 관리 소홀	□□□실	시정	-
〈 건설행정분야 - 2건 〉				
38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매수처리 부적정	□□□과	주의	121
39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적정	□□□과	주의	122
〈 문화공보분야 - 1건 〉				
40	노래연습장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126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세외수입분야 - 3건 〉				
41	돌출간판 허가에 따른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부적정	□□□과	시정	129
42	도로 점·사용료 장기간 체납자 관리 소홀	□□□과	주의	131
4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처분 소홀	□□□과	시정	133
〈 재산관리분야 - 4건 〉				
44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과	시정	136
45	국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소홀	□□□과	시정	138
46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감정평가 소홀	□□□과	주의	139
47	정수승인 사전절차 미이행후 정수물품 예산 계상	□□□실 외 6개부서	시정	140
〈 도시정비분야 - 2건 〉				
48	제거된 광고물의 사후관리 소홀	□□□과	주의	143
49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부적정	□□□과	주의	146
〈 토목·건설분야 - 14건 〉				
50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및 징수 부적정	□□□과	시정	149
51	건설폐기물 반출관리 소홀	□□□과외	주의	151
5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부적정	□□□과외	시정	153
53	시 경계 아치조형물 설치공사 공모 부적정	□□□과	주의	156
54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 소홀	□□□과외	시정	158
55	도로내 맨홀관리 부적정	□□□과	시정	160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56	설계변경 조치 및 준공검사 소홀	□□□과	주의	162
57	관내 준설공사 시행과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과	주의	164
58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관리 부적정	□□□과	주의	166
59	하수도공사 준공검사 소홀	□□□과	시정	168
60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지구 내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과 □□□과	주의	170
61	oo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과	시정 주의	173
62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배치 부적정	□□□과외	주의	175
63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미이행	□□□과	주의	177
현지 처분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배치 부적정	□□□과	시정	-
〈 주택·건축분야 - 7건 〉				
64	건축허가 취소처리 소홀	□□□과	시정	179
65	공개공지 유지관리 단속 소홀	□□□과	시정	181
66	건축허가 표지판 미설치현장 조치 소홀	□□□과	시정	183
67	준공인가전 사전 입주 조치 소홀	□□□과	시정	185
6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 부적정	□□□과	시정	187
69	건축공사 품질관리 소홀	□□□과	시정	189
70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과	주의	191
〈 토지·지적분야 - 7건 〉				
71	토지이동(지목변경,토지합병) 신청 소홀	□□□과	시정	194
72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보증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196
73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 소홀	□□□과	시정	198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74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고시 소홀	□□□과	시정	200
75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미흡	□□□□공사	주의	202
76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징수 소홀	□□□과	시정	204
77	지적도 근점 성과표 미기재	□□□과	시정	206

인사조직분야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문경고 처분자 서면경고 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불문(경고) 처분자 현황

의 결 일	소 속	직 급	성 명	협 의 내 용	요구자의견	처분결과
2005.3.22	□□□과	007급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경징계	불문경고
“	□□□동	006급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경징계	불문경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칙 제1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시행지침 제8조에 의하면 징계처분권자가 인사위원회로부터 경고할 것을 권고 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2005. 3. 22 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징계 요구되어 불문(경고)로 의결된 □□□과 ○○○ 등 2명에 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칙 등 인사관련 규정 등의 맞게 불문경고자에 대한 기관장 명의의 서면 경고 등의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임업9급 제한경쟁특별 임용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임업9급 제한경쟁 특별임용 현황

임용 인원	정 원 승인일	조례규칙 개정일	임용업무 추진내역					비 고
			특별임용 계획(안)	인 사 위 사 전 의 결	임용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최 종 합격자공고	
4명	05.7.26	05.10.20	05.9.22	05.9.23	05.9.28	05.10.12	05.10.19	서류전형 및 면접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 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삼산1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조치와 완벽한 인수인계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임업직 공무원 4명의 정원을 당해 자치단체 정원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임용운영 하여야 함에도

2005.7.26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원 승인을 득한 후 2005.9.22 2005년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부평구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득한 후

2005.9.28 특별임용 시험공고를 실시하여 2005.10.12 서류전형 및 2005.10.19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으나

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은 구의회 의결을 거쳐 2005. 11. 20 개정 발령되어 조례에 따른 정원 확보이전에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지방 공무원 임용령 등의 인사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등 인사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기본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공개경쟁 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시기 바라며, 임용업무 추진시 관련 조례 등의 절차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모범공무원 포상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모범공무원 포상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	비 고
계	76	16	16	16	16	12	44개부서
구분청	51	8	11	12	12	8	20개 과
의회.동	25	8	5	4	4	4	24개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구정의 각 분야에서 투명한 사명감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매 분기 4명씩 포상하고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3일간 특별휴가 및 6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지급하여 부부동반의 여행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사기 양양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격려 계획(97.1)】

부평구 □□□과에서는 위 계획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을 함에 있어 현업 및 격무부서 직원 등의 사기를 고려하여 부서(기관)별 포상자 등을 객관성 있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지원부서인 □□□실 5명, □□□과 4명 등 지원부서 및 구분청 공무원들에게 수상자가 편중되어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최근 5년동안 단 1명도 포함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1997. 1. 수립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포상에 따른 근거를 마련치 않고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관장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는 등 모범공무원 포상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 및 조건과 수반되는 예산의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위 제도 운영에 따라 구정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포상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66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무원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

소 속	직 급	성 명	부적정지급액	사 유	비 고
계			1,660,000원		
□□□동	○○7급	○○○	400,000원	부모전출 중복지급	
□□□과	○○7급	○○○	280,000원	배우자 복직 중복지급	
□□□과	○○6급	○○○	880,000원	부모전출 중복지급	
□□□과	○○8급	○○○	100,000원	시모전출 중복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고 부양가족 기본요건은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가 심한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범위로 하고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3만원 기타부양가족은 월 2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변동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동 ○○○가 2004.10월부터 2006.6월 휴직시까지 부모의 가족수당 10개월분 400,000원을 동일세대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지급하는 등 총 4명, 1,660,000원의 가족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초과지급된 가족수당 1,660,000원은 회수조치 하시고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실(□□□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0,16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허위경력증명서 제출에 따른 부당급여 수령자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부당급여 수령자 처리 현황(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단위:천원)

소속	직급	성명	호봉내역		부당 지급액	조치내역			비고
			입사당시	허위조정		신분상	재정상	사법상	
□□팀	6급	○○○	3호봉“갑”	5호봉“갑”	10,160	파면 (05.11.15)	미조치	미조치	

부평구 □□□공단 전 □□□팀장 ○○○은 2000. 5. 8 공채로 입사하여 2002. 3. 11부터 2005. 11. 15 파면 될때까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 2004. 9. 20 『공단직원 승급 재조정 운영 및 호봉 재확정 계획』에 따라 추가 경력사항인 △△△(84.2.25~87.3.13)근무기간 1년6월을 추가로 적용하여 9호봉에서 11호봉(10년7월)으로 2004.12.22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 2005.1.31 『호봉 재확정 관련 재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확인할수 없어 허위사실로 조사됨(2005.8.30 △△△대표 ○○○)

- 2005.10.19~10.25까지 자체감사를 거쳐 입사당시 제출한 △△△(93.3.16~95.11.8)과 △△△(97.12.1~99.9.30)경력증명서도 허위경력과 허위공문서로 최종 확인됨.

위 사항으로 부평구 □□□공단에서는 공단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 의무위반행위로 공단 인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05.10.27 징계요구하여 2005.11.15 파면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처분 요구하였으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초과 지급한 임금 10,160,580원은 회수 조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조치하고 있는가 하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하고 있는 등 업무추진을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위 건은 범죄행위로 고발대상이나 행위자를 2005. 11. 15 파면조치 하였으므로 허위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임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사법기관 고발조치함은 물론 시설관리 공단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실(□□□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03년 제3회 직원 공개제한경쟁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2003년 제3회 직원 채용현황

계	전기6급	전기8급	기계8급	영선직	일용직	비 고
6명	1명	1명	1명	1명	2명	

부평구 □□□공단에서는 2003. 9. 22 직원공개제한 특별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부평구 □□□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후 2003.9.29 시험공고를 한후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같은해 10.9 최종 합격자를 공고 하였습니다

부평구 □□□공단 직원 공개제한 특별임용 계획을 수립시 응시연령은 『만20세 이상~ 』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청하여 같은해 9.24 응시연령을 『시험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같은해 9.29 시험공고시 응시연령을 『만20세 이상 54세 이하』로 임의 변경하여 공고하였으나

부평구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의 채용 제한연령 사항에는 “직원으로서 채용되는 자의 최고 연령을 5급이하 직원은 5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예외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평구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채용방법에 따르면 신규채용되는 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②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소지자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자
- ④ 기능직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해당직무분야의 사무직 또는 기술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⑤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 ⑥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되는 경우
- ⑦ 퇴직자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용 할 경우
- ⑧ 청사시설의 관리, 위생관리 등 현업직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임용하는 경우
- ⑨ 기타 기구의 확장, 업무기능의 증가 등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부평구 □□□공단에서는 2003.9.22 직원공개제한특별임용을 실시하면서 공단 전기6급 1명을 채용함에 있어 2명의 지원자가 응시하여 1명의 합격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자격제한 기준 중 응시연령을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50세 이하로 정하여 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계획수립시는 『만 20세 이상~』 위원회 의결시에는 『만20세 이상 만55세미만』 공고시에는 『만20세 이상 만54세 미만』 등 각각 다른 연령 상한제한을 적용함으로서 공사인사규정을 위배하였으며

특별채용시 응시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 ① 공무원 8급으로 현직경력 1년이상, 9급으로 현직경력 3년이상인자
- ② 공무원 기능8급으로 현직경력 1년이상, 기능9급으로 현직경력 3년이상인자

③ 공사.공단6급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자

④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분야 경력소지자

⑤ 사기업 근무경력이 있는자

⑥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⑦ 병역을 필한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였으나

위 공고한 가격기준 중 ⑤⑥⑦항은 공단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응시자 2명 경력 및 자격을 살펴보면

① ○○○(1964.9.1)

- 자 격 증 : 전기기사2급,위험물취급자,인정검사조종이수,사용시설관리이수

- 경 력 : △△△사무소, △△△(주)전기주임, △△△(주)전기주임,
△△△(주)현 △△청사

② ○○○(1952.6.15)

- 자격증 : 없음

- 경 력 : △△△ 변전실 근무, △△△ 변전실 근무,

동일변전실 근무, △△△공사 근무

부평구 □□□공단 인사규정상 응시연령(50세) 및 특별채용 응시자격(사기업 근무)등 자격제한을 부당하게 하는 등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채용업무를 추진한 사항은 인사질서 문란행위로 징계대상에 해당되나 징계시효 경과로 지도·감독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훈계 등의 문책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분야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쓰레기봉투 제조 및 동판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현 황

(2006년도 3/4분기 쓰레기봉투 제작현황)

구 분	제작물량(매)	제작기간	제 작 업 체	제작금액	비 고
5 ℓ	50,000	'06.7.7~8.16	△ △ △(주)	43,850千원	조달계약 (130천매)
10 ℓ	500,000	"	"	"	
20 ℓ	700,000	"	"	"	
20 ℓ (재사용)	50,000	"	"	"	
50 ℓ	300,000	'06.7.19~8.15	(주) △ △ △	51,306千원	조달계약 (45천매)
100 ℓ	150,000		"	"	

○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처리스티커의제작)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불법제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부평구(□□□과)에서는 2006년도 3/4분기 쓰레기봉투를 제조발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당(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인쇄원판(동판)관리소홀

○ 인쇄원판(동판)은 화폐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수입인지를 발행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평구(□□□과)에서는 2006.7.7일 △△△(주)과 쓰레기봉투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2006.7.11일 착수계(착수년월일:2006.7.7 납품기한2006.8.16)와 2006.7.11 예정공정표를(압출7.10~7.25 인쇄7.14~7.31 가공7.18~8.15)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았고, 부평구에서는 제조에 필요한 인쇄원판(동판)을 2006.7.11 도급업체인 △△△(주)에게 보안각서와 인계(인수)증을 받고 전달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제조일지를 살펴보면 인쇄동판을 전달한 7.11일 이전인 7.10일부터 압출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인쇄 작업 시작전(7.14)에 동판을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제작일지 작성 소홀

○ 또한 제조일지는 위에서와 같이 인쇄동판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지책이므로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작업현황(일일 제작현황 등)을 일일이 체크한 후 제작일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추어 도급업체가 일괄적으로 작성 서명(대표자 ○○○)한 후 제출한 작업일지에 담당공무원이 제작기간(40일) 동안 일제히 동일하게 서명하므로서 형식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조 작업일지를 소홀하게 작성, 관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쓰레기봉투 제조시험 부적정

○ 부평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조하기 위해서 작성한 일반시방서 제13조(시험방법)에 의하면 두께측정, 인장강도 및 신장률·인열강도 등의 시험은 포장용 폴리에틸렌에 준하며 납품량 30만매당 1회 평가하며, 시험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제14조에서는 검사결과 적합판정 제품만 납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납품받은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더라도 부평구에서 직접 샘플링을 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부평구에서는 단지 시험기관에 공문으로만 시험의뢰 하면 시험기관에서는 도급업체를 통하서 샘플(시료)을 받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시험과정, 결과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시방서에 30만매당 1회씩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10ℓ 50만매, 20ℓ 70만매를 제조하면서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1회만 평가한 사실이 있는 등 부평구에서는 형식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시험결과를 가지고 쓰레기봉투제조에 대해 준공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부평구(□□□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 인쇄동판의 중요성을 감안 동판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제작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현장점검을 강화(제작일지 작성 철저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쓰레기봉투를 납품받기 위한 시험절차에 대해서도 발주처(부평구)에서 직접 시료(샘플)를 구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납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정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2005.3.22 계약금액 45,040천원의 「△△△초교옆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하면서 3천만원 이상 용역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이를 공사로 분류하여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2005.5.17 시행한 계약금액 34,408천원의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도 위와 같이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5조에 의거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 분담내용, 대금수령계좌 등을 포함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폐기물처리 용역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소각전문)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주), (주)△△△, (주)△△△ 등 각각의 도급자가 자신의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이며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에 이를 명백히 밝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치 않았으며, 준공금 청구시 입금계좌도 구성원 각각이 아닌 △△△(주)의 단독계좌로 청구하는 등 공동도급으로서의 명확한 회계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학술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차목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2005.4.12 계약금 77,000천원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부평구 공원녹지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시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근거로 위조항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 차목의 규정은 제4호의 “특정인의 용역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수의계약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건적입찰제도 시행 부적정 》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4.14 “전자건적입찰제 확대시행 계획(회계45110-878)”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건적입찰제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 □□□과에서는 2000.8.16 구 자체지침으로 결정한 “건적입찰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건적입찰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 12,012천원의 「부평구청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시행 하는 등 건적입찰제도 적용대상을 공사는 3천만원이상, 용역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은 제외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를 용역으로 착오 분류하여 입찰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하는 등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시행령 제21조 1항 6호 및 동시행규칙 제24조, 25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2006.4.20일 설계금액 44,973천원의 「민원팩스서버(동보장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여 가능지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 제한하였으며, 2006.5.18 「백본 네트워크 장비포트 증설용 카드 구매설치」에 대한 입찰공고시에도 참가지역을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제한하여 결론적으로 2건 모두 서울소재 업체가 낙찰되는 등 지역소재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과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2항 및 제27조 1항 2호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가로등 누전탐사 및 선로보수 용역」을 시행하면서 2005.10.5 계약금액 45,084,6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전기응용, 전기안전, 전자응용분야)신고를 필한 업체”로 “인천지역 소재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지역에는 위 조건으로 상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1개 업체에 불과하여 위 입찰은 최초의 입찰공고시부터 유찰될 수 밖에 없는 과도제한의 입찰이었으며 따라서 2회유찰 후에라도 인천지역제한을 완화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입찰을 실시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제한경쟁 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법규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등산로정비공사 제한경쟁입찰 부적정

[현 황]

○ 등산로 정비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업 체 명
oo산 및 oo산 주변 등산로 정비공사	'06. 9.14	'06.11.16	51,946	△ △ △조합
oo산 등산로 정비공사	'05.11. 4	'05.12.26	33,496	△ △ △조합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호 및 2호에 의하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1.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2.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대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등산객 증가에 따른 토사 유실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계약금 51,946천원을 들여 『oo산 및 oo산 주변 등산로 정비공사』를 추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목계단 설치, 경계 로프 웬스, 횡단배수로, 토 사방지책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등산과 건강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위건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사방사업법 제2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결론적으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지역내에서 응찰대상이 되는 3개의 oo조합만이 응찰하고 그중 oooo조합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은 시민들의 등산과 건강생활유지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oo조합 또는 oo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야 할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건설업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보유업체로 하여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도급 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 했어야 함에도 이와 관계가 없는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특정 단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타업체 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11.4 33,496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oo산 등산로 정비공사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호에 의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의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직불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계약금액 2,791,000천원을 들여 「□□□동 oo고가교 신설 및 주변연계도로 개설공사(1차)」를 (유)△△△과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유)△△△은 05.2.1 △△△(주)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05.2.2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외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발주처에 계약사항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처인 부평구에서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직불 여부를 판단·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2005 푸른마을 쉼터 조성공사(계약금액 52,172천원)도 위건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지급에 있어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대가가 하도업체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도급 계약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항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5조 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서류(계약서,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지급보증서 사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4조, 6조 및 9조에 따라 하도급율 82% 미만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은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 등으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 의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인천생태숲 조성공사(2차)」를 시행하면서 △△△(주)와 568,77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은 2006.7.7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8.3 관련서류를 갖추어 부평구 □□□□과에 하도급 신고를 하였고, 부평구 □□□□과에서는 □□□□과의 검토결과(□□□□과-6024, 2006.9.27)를 근거로 2006.10.4 하도급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에서는 계약체결 신고를 받은 이들 공사의 하도급율이 80.00%로 건설교통부령에 의한 기준비율(82%) 미만으로 심사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 절차 없이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통보하였으며, □□□□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도급을 승인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에서도 계약금 60,525천원의 「□□□동 경인국도 경인블럭 부근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가 하도율 81.42%로 △△△(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였음에도 위건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하도급 계약에 있어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하도급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단체수	지급총액	기존 정액단체		임의단체		비고
			단체수	지급액 (%)	단체수	지급액 (%)	
계		896,569		499,130(56%)		397,439(44%)	
2006년	39	446,746	10,	249,649(56%)	29	197,097(44%)	
2005년	42	449,823	10	249,481(55%)	32	200,342(45%)	

○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수	지급총액	사업비 (%)	비사업비(%)				
				계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
계	145	896,569	618,270 (69%)	278,299 (31%)	217,700	20,354	19,405	48,440
2006년	103	446,746	305,446 (68%)	141,300 (32%)	109,060	10,662	8,734	12,844
2005년	42	449,823	312,824 (70%)	136,999 (30%)	108,640	9,692	10,671	7,996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구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법령·조례의 지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사업비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에 의하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포상금 등 현금 지출경비는 사업수행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 및 중복 지원 》

부평구에서는 매년 시민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2004년 정액보조단체 폐지라는 보조금 지급 방식 개편에 따라 사회단체별 지원보조금 규모 등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했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 2005년 및 2006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896,569천원 중 56%인 499,130천원이 정액 보조단체에 지급
- 유사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정액보조단체들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중복하여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사한 단체의 경우는 사업을 통합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도한 운영비 지원 》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비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평구에서는 2005년 및 2006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896,569천원 중 31%인 278,299천원이 비 사업비로 지급되었으며,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별지 작성내용과 같이 지급된 보조금 중 인건비 및 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 중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기존 정액단체 등 특정단체에 대한 인건비 편중지원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 지원 사업을 중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유사단체의 경우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일시사역인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1. 현 황

○ 일시사역인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지출현황

[일반회계 일시사역인부]

구 분	인원	지 출 내 용				지출과목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계		109,666,950	53,259,750	24,046,770	32,359,430	
2006년	113	36,203,540	21,445,200	9,891,790	4,866,550	일반회계 일용인부임
2005년	117	73,462,410	31,814,550	14,154,980	27,492,880	

[주차장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

구 분	인원	지 출 내 용				지출과목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	
계		10,731,530	2,287,800	1,467,410	6,976,320	
2006년	4	5,896,110	788,400	537,330	4,570,380	일반회계 일용인부임
2005년	5	4,835,420	1,499,400	930,080	2,405,940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정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용인부임(101-09)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하며, 일시사역인부임(101-10)은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일시사역인부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하여야 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 일시사역인부 고용기준 등 고용계획 미 수립 》

부평구 □□□과에서는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의 고용기준을 명시한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량 시기에 따라 고용하고, 사업의 종료시 고용을 해제하여야 하나,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집계요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를 상기 고용계획을 미 수립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연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 일시사역인부 고용관련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지급 》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및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위 도표 일시사역인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지출 현황과 같이 2005년 1월 이후 2006년 10월 현재까지 일시사역인부의 법정 부담금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용인부임에서 2005년 122명에게 78,297,830원, 2006년 117명에게 42,099,650원 등 총 120,397,4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혼용 》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여 일반회계에서 분리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계정으로써 경영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임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하고,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등은 특별회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하여야 했으나 이를 일반회계 일용인부임에서 2005년 5명에게 4,835,420원, 2006년 4명에게 5,896,110원 등 총 120,397,4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함에 있어 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의 고용기준을 명시한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량 시기에 따라 고용하고, 사업의 종료시 고용을 해제하기 바랍니다.
- 일시사역인부 고용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등을 예산별 일시사역인부임에 편성 집행하기 바랍니다.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직원에게 엄정 주의를 촉구하며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실, □□□과, □□□과, □□□과,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부대비 집행 및 예산편성 부적정

○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공사비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계	수수료	수용비	여비	피복비	기타
계	50,876,586	663,726	216,572	25,246	13,057	146,315	7,420	24,534
2006년	24,643,420	438,110	120,504	24,560	4,608	78,215	3,035	10,086
2005년	26,233,166	225,616	96,068	686	8,449	68,100	4,385	14,448

○ 공사감독관 외 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비고
	66,155	27,475	35,150	

○ 공사감독관 외 피복비 등 구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수령자
				2,581	
□□□과	작업복	1	135	135	팀장
	작업화	1	110	110	"
□□□과	작업복	4	233	932	과장,팀장
	작업화	4	150	600	"
□□□과	방한화	6	65	390	타 직원
	장갑	6	48	288	"
	모자	6	21	126	"

○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부 적정 사례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2005년	□□□과	ooo 도서관 추가공사 설계용역비	4,300	시설부대비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III-10-2 비목별 세부집행지침 시설부대비(401-03) 규정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 공사의 조달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당해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공사 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나, 단순한 관내순찰, 현장지도 등 일상적인 업무 출장인 경우 시설부대비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감독공무원의 직상급자 등의 현장지도 출장은 본연의 업무로써 일상적인 추진사항이므로 시설부대비가 아닌 국내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하면 실시설계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 부적정 》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직상급자 등의 현장지도 등 출장은 본연의 업무로써 일상적인 추진사항이므로 시설부대비가 아닌 국내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평구(□□□과,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위 “도표”와 같이 2005년 1월 이후 2006년 10월 감사일 현재 까지 시설부대비 총 663,726천원 중 216,57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된 시설부대비 중 과다하게 67.5%인 146,315천원을 여비로 편중 집행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여비로 지출된 146,315천원 중 42.8%인 62,625천원을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부 적정하게 국내여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과, □□□과, □□□과에서는 공사감독관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작업복 및 작업화를 2,581천원 상당 구입 공사감독관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부적정 》

실시설계비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 2005년도 사업인 기적의 도서관 건립 추가공사 설계변경 용역비 예산 4,300천원을 시설비에 계상 집행하여야 했으나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시설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 바라며, 감독공무원의 직상급자 등의 현장지도 출장은 본연의 업무로써 일상적인 추진사항이므로 시설부대비가 아닌 국내여비에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 관련

[위법부당내용]

준공계 접수 이후에는 변경계약서 작성이 불가함에 따라 설계 변경은 준공계 접수 이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정산 준공을 하자면 도급자에게 준공계 제출시 정산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감액 준공 또는 증액 준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설계 내역서상 물량 등의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반드시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도급자가 준공계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 등 보증증서는 유가증권 수불부에 기재하고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물량감액) 관련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의한 하수도 준설공사 부평·산곡·십정동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8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준공계를 접수하며 정산서를 함께 접수하여 정산 준공을 하거나, 물량 감소에 따른 계약변경 등 절차를 선행하고 준공계를 접수하여 준공검사 등을 이행 하여야 했으나

하수도준설공사에 있어 준공계를 접수하고 이후 설계변경(감액)에 의한 변경계약서를 작성 후 준공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도 준설공사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 보증증서 편철 관련 》

각종 계약 체결시 징구하게 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 보증금 등 보증증서는 유가증권 수불부에 기재하고 따로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회계지출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 》

하수도 준설토(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함에 있어서도 설계변경(물량 증감) 및 각종 보증증서 편철에 있어서도 하수도 준설공사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향후 하수도준설공사 준공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설계변경(물량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초 설계시 일반시방서상에 “정확한 물량이 산출될 때까지 공사중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기입하여 공기연기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 각종 계약체결 및 이행에 징구 되는 각종 보증증서 등을 유가증권 수불부에 기재하고 따로 보관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분야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사후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2004년도 4/4분기부터 2006년도 2/4분기까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업소개소 외 9개 업소에 대하여 「구인·구직 접수 대장 미작성」, 「보증보험 재가입 미이행」 등을 지적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의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미조치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할 수 있음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매년 체납세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독촉공문만 발송하는 데 그치는 등 과년도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음에 따라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감사일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479명(체납액 224백만원)에 이르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차량 행정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및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며,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005.12.02에서 2006.10.18까지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동 234-47) 외 50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허가당시 신고된 차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간의 사업전부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안내문만 발송하였으며, 특히 ○○○(□□□동 13-10) 외 27명에 대해서는 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허가기준에 미달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차고지 임대기간이 종료된 허가기준에 미달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말소등록차량 과태료 부과 소환

[위법부당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4조(과태료)에 의거 기한내에 수출이행여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후, 9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05.1.12~2005.7.25까지 수출을 위한 차량 말소등록 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거나 신규등록(폐차신고) 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9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수출이행여부 미신고 말소등록 차량 소유자 9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여부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결정하시고 향후에는 자동차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6월이 지난 차량에 대하여는 수출 이행여부 신고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주의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관리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 현황

구 분	지급내용	지출금액	비 고
△ △ △	시설장동우회비	60,000원	동우회비
	"	20,000원	"
	"	20,000원	"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정산보고 지연 현황

시 설 명	보고일자	지연일	비 고
△ △ △	2006. 1. 17	7 일	
△ △ △	2006. 8. 10	31 일	
△ △ △	2006. 7. 24	14 일	
△ △ △	2006. 7. 20	10 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41조의2와 5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하며, 후원자에게는 사용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에서는 후원자에게 후원금 사용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않았고, 2006.3.20일등 3회에 걸쳐 시설장동우회비로 총 1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후원금을 개인용으로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 3개소에서는 최소 7일에서 최장31일이 경과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등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정산보고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앞으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용으로 사용한 후원금 100천원은 시설예산(후원금)으로 반납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7,486천원 환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 붙임1
-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자 현황 : 붙임2
- 노인교통수당 지급 지연처리 현황 : 붙임3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분기 첫달(1,4,7,10월) 20일에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보건복지부 지침(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질의응답 사례집, 2004. 5)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지급정지) 기준은 ‘사망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외 58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기준을 사망일로 하지 않고 사망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3,528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하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노인교통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동 ○○○외 106명은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3,958천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서면으로 환수요청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환수조치 하지 않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수당 지급시기는 매분기 첫달 20일에 지급해야 함에도 □□□동외 9개동에서는 지급기일을 최소 1일에서 최대 6일이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수당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대로 지급하였음.

부평구는 노인교통수당 수혜대상자(38,687명)가 많은 관계로 수당지급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 또는 바쁘다는 사유로 교통수당지급이 지연 처리 되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등 노인교통수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구청 담당부서(□□□과)에서는 정기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부당하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7,486천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 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1	□□□동	○○○	05.06.24	05.09.14	05. 3/4	36,000
2	□□□동	○○○	05.09.30	05.10.26	05. 4/4	36,000
3	□□□동	○○○	05.07.29	05.11.01	05. 4/4	36,000
4	□□□동	○○○	05.09.02	06.02.20	05.4/4,06. 1/4	72,000
5	□□□동	○○○	05.11.21	06.02.27	06. 1/4	36,000
6	□□□동	○○○	06.03.19	06.05.03	06.2/4	36,000
7	□□□동	○○○	04.12.27	05.01.25	05. 1/4	42,000
8	□□□동	○○○	05.03.31	05.04.06	05.2/4	36,000
9	□□□동	○○○	05.03.30	05.04.06	05.2/4	36,000
10	□□□동	○○○	05.01.02	06.01.02	06. 1/4,2/4,3/4,4/4	144,000
11	□□□동	○○○	06.03.17	06.04.25	06.2/4	36,000
12	□□□동	○○○	05.03.25	05.04.04	05.2/4,3/4,4/4	108,000
13	□□□동	○○○	05.03.27	05.04.01	05.2/4	36,000
14	□□□동	○○○	04.12.15	05.01.19	05. 1/4	36,000
15	□□□동	○○○	05.01.01	05.10.10	05. 1/4,2/4,3/4,4/4	144,000
16	□□□동	○○○	06.05.10	06.08.23	05.3/4	36,000
17	□□□동	○○○	04.10.24	06.05.26	05.1/4,2/4,3/4,4/4,06. 1/4,2/4	216,000
18	□□□동	○○○	05.01.03	05.01.12	05. 1/4,2/4,3/4,4/4	144,000
19	□□□동	○○○	05.09.27	05.10.18	05.4/4	36,000
20	□□□동	○○○	05.02.26	03.03.05	05.2/4,3/4	72,000
21	□□□동	○○○	04.12.29	05.01.03	05. 1/4	36,000
22	□□□동	○○○	05.01.27	05.05.02	05.2/4	36,000
23	□□□동	○○○	06.06.01	06.07.31	06.3/4	36,000
24	□□□동	○○○	05.08.17	05.09.14	05.4/4	36,000
25	□□□동	○○○	05.09.11	05.09.16	05.4/4	36,000
26	□□□동	○○○	05.09.17	05.09.20	05.4/4	36,000
27	□□□동	○○○	05.09.19	05.09.26	05.4/4	36,000
28	□□□동	○○○	03.03.28	05.10.10	05. 1/4,2/4,3/4,4/4	144,000
29	□□□동	○○○	05.12.26	06.01.24	06. 1/4,2/4	72,000
30	□□□동	○○○	05.12.24	06.01.26	06. 1/4	36,000
31	□□□동	○○○	05.06.28	06.02.23	05.3/4,4/4,06. 1/4	108,000
32	□□□동	○○○	06.03.21	06.03.24	06.2/4	36,000
33	□□□동	○○○	06.01.17	06.04.24	06. 1/4,2/4	72,000
34	□□□동	○○○	06.03.31	06.04.28	06.2/4	36,000
35	□□□동	○○○	06.06.22	06.07.20	06.3/4	36,000
36	□□□동	○○○	06.04.25	06.08.09	06.3/4	36,000
37	□□□동	○○○	04.12.27	05.01.26	05. 1/4	36,000
38	□□□동	○○○	05.09.29	05.10.21	05.4/4	36,000
39	□□□동	○○○	05.02.15	05.05.02	05.2/4	36,000

40	□□□동	○○○	06.03.16	06.03.23	06.2/4	36,000
41	□□□동	○○○	05.12.29	06.02.03	06.1/4	36,000
42	□□□동	○○○	05.05.19	05.07.18	05.3/4,4/4,06.1/4	108,000
43	□□□동	○○○	05.07.16	05.07.19	05.3/4,4/4,06.1/4	108,000
44	□□□동	○○○	05.07.27	05.08.01	05.4/4,06.1/4	72,000
45	□□□동	○○○	05.08.04	05.08.08	05.4/4,06.1/4	72,000
46	□□□동	○○○	05.07.26	05.08.18	05.4/4,06.1/4	72,000
47	□□□동	○○○	05.08.17	05.08.23	05.4/4,06.1/4	72,000
48	□□□동	○○○	05.08.18	05.08.24	05.4/4,06.1/4	72,000
49	□□□동	○○○	05.11.09	05.11.14	06.1/4	36,000
50	□□□동	○○○	05.11.12	05.12.13	06.1/4	36,000
51	□□□동	○○○	05.12.27	05.12.30	06.1/4	42,000
52	□□□동	○○○	05.12.15	05.12.30	06.1/4	36,000
53	□□□동	○○○	05.09.25	06.02.13	05.4/4,06.1/4	72,000
54	□□□동	○○○	06.06.18	06.07.24	06.3/4	48,000
55	□□□동	○○○	05.05.23	05.06.17	05.3/4	12,000
56	□□□동	○○○	06.05.28	06.06.05	06.3/4	36,000
57	□□□동	○○○	05.01.27	03.13.06	05.2/4,3/4,4/4,06.1/4	144,000
58	□□□동	○○○	05.06.01	05.09.12	05.3/4	36,000
59	□□□동	○○○	05.09.03	06.04.12	05.4/4,06.1/4	72,000
계						3,528,000

<붙임2>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자 현황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 사망자)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1	□□□동	○○○	05.04.09	05.05.09	05.2/4	36,000
2	□□□동	○○○	06.01.03	06.02.01	06.1/4	36,000
3	□□□동	○○○	06.04.13	06.04.24	06.2/4	36,000
4	□□□동	○○○	06.04.05	06.04.24	06.2/4	36,000
5	□□□동	○○○	06.04.06	06.05.19	06.2/4	36,000
6	□□□동	○○○	05.07.19	05.08.03	05.3/4	36,000
7	□□□동	○○○	06.01.15	06.01.19	06.1/4	48,000
8	□□□동	○○○	06.01.19	06.01.24	06.1/4	36,000
9	□□□동	○○○	06.04.19	06.04.24	06.2/4	36,000
10	□□□동	○○○	05.04.11	05.04.18	05.2/4	36,000
11	□□□동	○○○	05.10.15	05.10.25	05.4/4	36,000
12	□□□동	○○○	06.01.04	06.01.10	06.1/4	36,000
13	□□□동	○○○	06.01.03	06.01.09	06.1/4	36,000
14	□□□동	○○○	05.07.15	05.07.25	05.3/4	36,000
15	□□□동	○○○	05.04.07	05.04.15	05.2/4	36,000
16	□□□동	○○○	05.01.09	05.01.24	05.1/4	42,000
17	□□□동	○○○	06.01.01	06.01.06	06.1/4	36,000
18	□□□동	○○○	06.07.12	06.07.18	06.3/4	16,000
19	□□□동	○○○	06.07.19	06.08.02	06.3/4	36,000
20	□□□동	○○○	05.01.17	05.01.21	05.1/4	36,000
21	□□□동	○○○	06.04.17	06.05.02	06.2/4	36,000
22	□□□동	○○○	05.07.17	05.08.03	05.3/4	36,000
23	□□□동	○○○	05.04.15	05.04.26	05.2/4	36,000
24	□□□동	○○○	05.01.05	05.01.21	05.1/4	36,000
25	□□□동	○○○	06.04.19	06.04.28	06.2/4	72,000
26	□□□동	○○○	06.01.18	06.02.01	06.1/4	36,000
27	□□□동	○○○	05.01.05	05.01.15	05.1/4	36,000
28	□□□동	○○○	05.01.03	05.01.27	05.1/4	36,000
29	□□□동	○○○	05.01.14	05.02.01	05.1/4	36,000
30	□□□동	○○○	05.07.17	05.07.26	05.3/4	36,000
31	□□□동	○○○	05.10.06	05.10.20	05.4/4	36,000
32	□□□동	○○○	06.04.10	06.04.13	06.2/4	36,000
33	□□□동	○○○	06.07.11	06.08.08	06.3/4	36,000
34	□□□동	○○○	05.01.12	05.02.07	05.1/4	36,000
35	□□□동	○○○	05.10.12	05.10.20	05.4/4	42,000
36	□□□동	○○○	05.10.04	05.10.20	05.4/4	36,000
37	□□□동	○○○	05.10.16	05.10.21	05.4/4	36,000
38	□□□동	○○○	05.10.20	05.11.07	05.4/4	36,000
39	□□□동	○○○	06.01.18	06.01.25	06.1/4	48,000

40	□□□동	○○○	06.01.17	06.01.27	06.1/4	36,000
41	□□□동	○○○	06.01.16	06.02.21	06.1/4	36,000
42	□□□동	○○○	06.01.08	06.03.03	06.1/4	36,000
43	□□□동	○○○	06.04.08	06.05.03	06.2/4	36,000
44	□□□동	○○○	06.07.13	06.07.20	06.3/4	36,000
45	□□□동	○○○	06.07.07	06.08.04	06.3/4	36,000
46	□□□동	○○○	05.07.06	05.08.01	05.3/4	36,000
47	□□□동	○○○	05.10.11	05.10.19	05.4/4	36,000
48	□□□동	○○○	06.04.06	06.04.18	06.2/4	36,000
49	□□□동	○○○	06.04.15	06.04.19	06.2/4	36,000
50	□□□동	○○○	06.04.10	06.04.17	06.2/4	36,000
51	□□□동	○○○	05.10.13	05.11.03	05.4/4	36,000
52	□□□동	○○○	05.01.02	05.01.21	05.1/4	36,000
53	□□□동	○○○	06.01.05	06.02.03	06.1/4	36,000
54	□□□동	○○○	05.04.19	05.05.11	05.2/4	36,000
55	□□□동	○○○	06.04.03	06.04.21	06.2/4	36,000
56	□□□동	○○○	05.01.16	05.01.24	05.1/4	36,000
57	□□□동	○○○	05.10.19	05.10.24	05.4/4	36,000
58	□□□동	○○○	06.01.13	06.01.20	06.1/4	36,000
59	□□□동	○○○	06.01.16	06.01.20	06.1/4	36,000
60	□□□동	○○○	06.04.18	06.04.24	06.2/4	36,000
61	□□□동	○○○	06.04.15	06.06.12	06.2/4	36,000
62	□□□동	○○○	06.07.17	06.07.28	06.3/4	36,000
63	□□□동	○○○	05.04.18	05.05.11	05.2/4	42,000
64	□□□동	○○○	05.04.15	05.05.11	05.2/4	36,000
65	□□□동	○○○	06.07.18	06.07.26	06.3/4	48,000
66	□□□동	○○○	06.04.16	06.04.27	06.2/4	36,000
67	□□□동	○○○	06.07.11	06.07.25	06.3/4	36,000
68	□□□동	○○○	06.07.14	06.07.28	06.3/4	48,000
69	□□□동	○○○	06.07.05	06.08.04	06.3/4	48,000
70	□□□동	○○○	06.07.02	06.07.19	06.3/4	48,000
71	□□□동	○○○	02.04.04	06.05.30	06.2/4	36,000
72	□□□동	○○○	06.04.05	06.04.27	06.2/4	36,000
73	□□□동	○○○	05.07.03	05.08.03	05.3/4	36,000
74	□□□동	○○○	05.10.19	05.10.25	05.4/4	36,000
75	□□□동	○○○	06.04.16	06.05.09	06.2/4	36,000
76	□□□동	○○○	06.07.07	06.07.26	06.3/4	36,000
77	□□□동	○○○	06.07.05	06.07.28	06.3/4	36,000
78	□□□동	○○○	05.01.03	05.01.20	05.1/4	36,000
79	□□□동	○○○	05.01.11	05.01.17	05.1/4	36,000
80	□□□동	○○○	05.10.13	05.11.11	05.4/4	36,000
81	□□□동	○○○	06.07.17	06.07.31	06.3/4	36,000
82	□□□동	○○○	06.07.07	06.08.02	06.3/4	36,000
83	□□□동	○○○	06.07.13	06.09.20	06.3/4	36,000
84	□□□동	○○○	05.04.05	05.05.04	05.2/4	36,000

85	□□□동	○○○	05.04.18	05.05.10	05.2/4	36,000
86	□□□동	○○○	05.10.10	05.11.01	05.4/4	36,000
87	□□□동	○○○	06.04.19	06.05.17	06.2/4	36,000
88	□□□동	○○○	05.01.11	05.04.20	05.1/4	36,000
89	□□□동	○○○	05.04.12	05.04.28	05.2/4	36,000
90	□□□동	○○○	05.04.17	05.04.21	05.2/4	36,000
91	□□□동	○○○	05.10.11	05.10.24	05.4/4	36,000
92	□□□동	○○○	05.10.11	05.10.24	05.4/4	36,000
93	□□□동	○○○	05.10.18	05.10.21	05.4/4	36,000
94	□□□동	○○○	05.10.19	05.10.24	05.4/4	36,000
95	□□□동	○○○	05.07.08	05.09.05	05.3/4	36,000
96	□□□동	○○○	06.01.06	06.01.31	06.1/4	36,000
97	□□□동	○○○	06.04.04	06.04.10	06.2/4	36,000
98	□□□동	○○○	06.04.04	06.04.06	06.2/4	36,000
99	□□□동	○○○	06.04.17	06.04.26	06.2/4	36,000
100	□□□동	○○○	06.04.17	06.05.02	06.2/4	36,000
101	□□□동	○○○	06.04.18	06.05.16	06.2/4	36,000
102	□□□동	○○○	06.04.18	06.04.24	06.1/4	36,000
103	□□□동	○○○	06.01.15	06.01.18	06.1/4	36,000
104	□□□동	○○○	06.01.07	06.01.17	06.1/4	36,000
105	□□□동	○○○	06.04.10	06.05.01	06.2/4	36,000
106	□□□동	○○○	06.04.19	06.04.28	06.2/4	36,000
107	□□□동	○○○	06.07.12	06.07.25	06.3/4	36,000
계						3,958,000

<붙임3>

노인교통수당 지급 지연 처리 현황

구 분		지급일	비 고
□□□동	○○○외 80명	1일 ~ 6일 지연	매분기 20일 지급
□□□동	○○○외 111명	1일 ~ 5일 지연	
□□□동	○○○외 47명	1일 ~ 4일 지연	
□□□동	○○○외 20명	1일 ~ 3일 지연	
□□□동	-	-	
□□□동	-	-	
□□□동	-	-	
□□□동	○○○외 57명	1일 ~ 4일 지연	
□□□동	○○○외 106명	1일 ~ 4일 지연	
□□□동	-	-	
□□□동	○○○외 48명	2일 ~ 4일 지연	
□□□동	-	-	
□□□동	○○○외 33명	1일 ~ 3일 지연	
□□□동	-	-	
□□□동	-	-	
□□□동	○○○외 8명	1일 ~ 4일 지연	
□□□동	-	-	
□□□동	-	-	
□□□동	○○○외 85명	1일 ~ 5일 지연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3)

[제 목]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후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2005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구 분	점검시설수	지적사항	비고
계	274	시정 847건, 주의129	
민간보육시설	125	시정 317건, 주의114	
가정보육시설	129	시정 491건, 주의 -	
정부지원보육시설	20	시정 39건, 주의 15	

○ 보육시설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 : 붙임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41조·제42조에 의거 보육사업내용 및 보육환경, 화재예방, 시설의 안전·위생관리, 각종 수입·지출 사항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 4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159일간 △△△어린이집외 273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교사배치 부적정등 총976건(시정847,주의129)을 지적하여, 158개시설 502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하였으나 △△△어린이집외 115개소 47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문(□□□과-13163,'05.11.15)만 발송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촉구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2005년도 지적사항 미조치 보육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분야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0000보호센터 위탁·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0000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평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2004.1월 의료법인 △△△병원 △△△을 oooo 보호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수탁기간 : 2004.1~2005.12)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모·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한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시 지침에는 시설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위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임의로 자격기준을 정신전문간호사로 변경· 위촉하였으며(2004년 당시 시 지침이 늦게 시달됨),

2005.12.21.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도 추진방침을 공개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 수탁기관의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자체 평가결과 80점(80%) 이상으로 평가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이면 공개경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임의로 변경· 결정하였으며,

자체평가 심사위원도 외부인사는 1인(○○○, 부평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제 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5인중 4인은 oooo을 비롯한 팀장 3명, 나머지 1명은 2년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던 △△△ 가족대표로 구성되어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2. 위탁 의료시설 사업비 정산 소홀

구에서 oooo보호센터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병원 △△△으로부터 분기별로 제출받은 실적보고를 검토한 결과 인건비, 사용자부담금, 관리운영

비, 프로그램비 등 주요 예산과목의 예산배정 및 집행내역과 표본으로 통장 복사본(1~3면)만을 제출하였는바,

분기별로 사업의 세부 추진실적, 예산과목별 주요 사업내용, 특히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의 주요 집행내역, 분기별로 지출한 통장복사본(3개월분) 등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시비보조(2005년 이전에는 시70: 구30, 2006년은 시50:구30)로 추진중인 oo센터 운영사업의 2004년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20,471천원)을 반납지출결의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결의하였다고 하나 실지 반납을 2005.4.6. 수탁기관으로부터 반납을 받는 등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하였다.

물론 관련부서 담당자의 주장대로 시 주무부서(□□□과)와 구 관련부서(□□□과) 등의 여러 여건 및 사정상 불가피 하였다고 하나, 각종 국·시비 보조금의 결산 및 정산 등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사업비 정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위 수탁기관의 경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oooo모금회로부터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일정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고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서 위 △△△병원 △△△과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oo사회복귀시설(□□□동 151-4, 시설장 ○○○)의 경우에도 국·시비 및 자체 부담금외에 일정금액의 후원금을 불특정인(신원미상)에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각 위탁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시 후원금의 총액이나 주요 집행내역을 국·시비 및 구비 보조금과 함께 정산·공개토록 지도함이 요구된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 oooo보호센터 등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귀 구의 관련조례나 시 지침,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각종 보조금의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동 건을 포함하여 귀 구 자체사무나 시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바, 민간 위탁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의 편성·집행시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2. 아울러 보조금 정산시 후원금을 포함시켜 위탁시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모자보건약품 등 구매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예규 204호, 2006.2.7)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 법률 시행이전에는 행정자치부 □□□과-516(2005.2.3)호와 시 □□□과-1719(2005.2.1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시기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 공개기간은 계약종료후 3년까지 공개토록 권고·시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부평구 □□□소에서는 2006.8.24. 니코틴 소변검사(정성) 키트를 2,200천원 상당을 구입하고, 또한 니코틴 소변검사(정량) 키트를 2006.9.22. 4,950천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각각 △△△(주)과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는바,

위 2건은 각각의 경우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마땅히 연초에 당해연도 소요량을 파악하여 단가계약이나 입찰 또는 전자견적을 통하여 구매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또한 모자보건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06.2.20. △△△에서 5,600천원, '06.5.19. 역시 동일한 업체로부터 5,600천원, '06.8.11. 동일업체로부터 4,480천원 상당의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위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견적서를 받아 구매를 하는 등 모자보건약품 및 니코틴 검사용 키트를 부적정하게 구매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위 법령 및 예규 시행이전인 2005년도에는 3,000만원 미만의 물품 등의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설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어야 하나,

니코틴 소변검사용 키트 3건(△△△ 5,500천원씩 3회 구입), 모자보건약품 1건(△△△) 등 전자견적이나 입찰, 조달단가구매 등의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 구 또는 자체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모자보건약품, 니코틴 검사용 키트 등 각종 약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간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자견적에 따라 구입하시고, 아울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공개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형평성 결여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5조,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종별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동 법령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과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05.5.21. 부평역사 옆에 위치한 △△△에서 저녁 8~9시 사이에 영업장 밖에 객석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면서 가수를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인근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았음에도 '05.5.24. 영업장의 영업은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행정처분은 하지 아니한 채로 종결을 지었고,

또한 '05.7.6. 동 건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재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역시 '05.7.8.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현지지도만 한 채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05.5.27. 인터넷으로 동암역 북광장에 소재한 △△△와 △△△에서 영업장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민원내용은 4월부터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3~4차례 전화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고함) '05.6.1. 현지 확인·조치를 함에 있어 △△△는 현지에서 즉시 철거하였다

는 사유로 현지지도를 하였고, △△△은 현지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1,5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동 업소는 동일 위반사항을 2차례 위반하여 가중처분됨),

‘05.7.5. △△△(□□□동 419-10) 업소에서 건물내 주차장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현지 확인후 ‘05.8.15. 영업장 면적확장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만원 처분을 하였고,

‘05.8.12. △△△(□□□동 406) 업소에서는 인근 공터에 천막까지 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05.8.12. 현지지도를 하였다고 회신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고,

‘05.9.27. □□□동 △△타운내 소위 먹자골목에 위치한 △△△, △△△, △△△ 등의 업소에서 영업장의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05.9.28. 현지 확인후 △△△에 대해서는 영업장의 영업으로 ‘05.10.21.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그 외 업소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떤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어떤 업소는 시정명령 처분을, 또 어떤 경우에는 현지지도만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형평성을 결여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감경기준 적용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제6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15]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9]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의 위법사항을 처분함에 있어서,

식품위생업소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나 판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기타 식품 등의 수급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공중위생업소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나 판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 한하여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2004.5.15. 자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기준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경감처분 효율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동 내용에 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시 1/2 감경하는 것은 법 기준과 동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외 “구청장 이상 표창수상 업소(1년 이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자가 장애인인 경우”, “적발된 청소년이 대학생, 군인인 경우(식품위생업소에 한함)”와 같이 관련법령의 범위를 일탈하여 과도하게 감경기준을 마련·시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06.4.20.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된 △△△(□□□동 657-20)에 대하여(적발당시 16세 및 17세 3명) 시민단체 임원(ooo운동)으로서 구청장 표창을 3회, 그 것도 3년이 훨씬 경과한 2001년 또는 2002년 수상경력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로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식품 또는 공중위생업소를 지도·단속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생업소 행정처분 감경기준” 중 관계법령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동 건은 감사원 등 타 중앙부처의 감사를 기 받은 점과 기관장 방침을 사전에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추진 부적정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관리지침(200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함에 있어 특정관리품목(30개)을 중점적으로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되,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수거를 지양하고 재래시장이나 학교주변,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의 취약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에 중점수거 품목에서 식육제품, 기타음료, 냉동식품, 유가공품 등은 제외하고, 추가로 우유, 알가공품,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 생식류 및 시리얼류 등의 품목을 중점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2006년도에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함에 있어서 중점품목에서 제외된 식육제품이나 기타음료, 유가공품 등을 계속 수거하고 있고, 추가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수거·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통식품을 수거함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이나 학교주변 등의 취약지역에서는 거의 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대형 할인마트에서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는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서는 이행상태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06.1.23.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이 적발 통보된 △△△(□□□동 252번지 소재, 유통기한 표시위반)과 △△△(□□□동 895-3소재, 제품명 표시위반)에 대하여 '06.2.15. 각각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명령서에 구체적인 시정내용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동 건에 대하여 '06.2.22. 담당자가 이행복명을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하였는바,

향후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정내용과 시정기한 및 완료보고 기일을 명시하여 처분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중처분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의 경우에는 “지워지는 잉크사용으로 유통기한 확인곤란”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이행복명서에 의하면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한 것”으로 복명을 하였으나, 그 이행상태가 매우 미흡한바, 압박인쇄 등의 방법으로 잉크가 지워지더라도 유통기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선토록 조치함이 요구된다.

[처 분 요 구]

○ 향후 유통식품 수거·검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해년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위생관리지침에 따라 중점 수거·대상품목이나 중점 수거 대상지역 등을 조정·시행하는 등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중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 개선을 요구하는 처분 시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하여 처분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등 구매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매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수분제거 용기(5ℓ) 24,000개와 전용수거용기(120ℓ) 1,000개를 구입하면서 입찰(입찰가격 107,000천원)을 통하여 구매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규격이나 재질은 거의 동일하나 밑바닥이 2004년도 이전 구입한 용기는 사각형인데 반하여 2005년도 이후 구입한 용기는 밑바닥이 둥그러워 세척이 용이하며, 또한 제작업체인 (주)△△△(□□□시 □□□면 □□□리 330-7소재)에서 제작한 용기가 특허청으로부터 2004.4.17. 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2005.1.12. 전용수거용기(120ℓ) 500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고(구매금액

17,000천원, 단가 33,500원),

2005.6.27. 동일 규격의 용기 400개를 동일한 업체에서 수의계약(구매금액 13,600천원)으로, 2005.8.29. 9,96천원 상당, 2005.10.7. 6,800천원 상당의 용기를 동일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으며,

2006.1.16. 역시 동일한 업체로부터 10,200천원 상당, 2006.4.10. 6,800천원 상당, 2006.7.7. 3,400천원 상당의 전용용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전용용기 1개의 단가를 환산하면 500개 구입한 경우 33,500원, 400개를 구입한 경우에는 32,400원, 300개를 구입한 경우에는 34,000원으로 평균 단가는 33,000원에 구입을 하였는바,

감사일 현재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동일 규격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의 단가를 조회하여본 결과,

△△△(주), △△△조합, △△△(주) 등 3개 업체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동일한 규격의 용기의 경우 단가가 29,455원으로서 위 제품과 개당 3,845원의 가격차이가 나는 바,

결과적으로 2005.1월부터 2006.7월까지 대략 2,00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주) △△△의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함으로써 7,69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련부서 담당자의 주장대로 실용신안등록을 한 제품으로서 밑바닥이 둥글게 제작되어 세척이 용이하고, 특히 동절기에 일반 제품보다 사용이 편리한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하겠으나,

관계법령에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집행됨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하여 조달단가로 구매를 하거나 입찰을 통하

여 구매를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소용 소모품 구매 부적정

아울러 부평구에서는 청소용품(대비재료)을 구매함에 있어서 대비재료를 포함한 청소용 소모품을 경진상사를 포함하여 3~4개 업체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29,631천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하였고,

2006.1.2. △△△로부터 5,538천원 상당의 대비재료를 구입하였으며, 2006.4.3.과 2006.6.22. 각각 동일업체로부터 4,655천원 상당의 대비재료를 구매하면서 수의구매를 하였는바,

행자부훈령(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2006.2.7. 시행)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전적을 통하여 구매를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005년 1월 이전까지는 매 구매시마다 5,538천원 상당의 대비재료를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매하다가,

2006.2월 이후에는 2차례에 걸쳐 500만원 이하로 나누어 동일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이는 명백히 위 훈령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동일업체로부터 수의구매를 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청소용 소모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하여 단가계약이나 입찰을 통한 구매를 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수의계약내역 공개 권고 시달(□□□과 - 516, 2005.2.3)”과 시 □□□과-1719(2005.2.11)호에 따라 시를 비롯한 산하 자치단체와 각 사업소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매 등을 할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를 하였음에도,

부평구에서는 위와 같이 2005년 이후 청소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기타 미화원 피복 등을 구매하면서 건당 50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의 구매가 수십차례 이루어 졌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각종 청소용품을 구매함에 있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매하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해서는 구매물품이 실용신안등록을 득한 점, 타 제조업체 물품보다 편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비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청소용 소모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목의 경우 연초 소요량을 파악하여 단가계약이나 전자견적에 의하여 구매를 하되, 부득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개대상 구매내역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방치폐기물(제강슬래그)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방치폐기물량 산정 잘못으로 적정 국고보조금 확보 미흡 초래

2004.2.10. 국무회의와 시장지시사항(2004-1-210)과 관련하여 '98년 IMF 이후 업체부도로 △△△(□□□동 소재)부지에 방치되어온 제강슬래그의 처리방안을 포함하여 2004.2월에 대통령과 시장지시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환경저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이 2004.6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고,

또한 이를 근거로 부평구에서는 2005.1.19. 당해 토지를 경매로 인수한 ○○○외 1인에 대하여 조치명령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2005.3.10. 위 2인에게 2005.6.30.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2005.4.4. 당해 폐기물을 2005년 연말까지 처리토록 촉구공문을 해당 자치단체인 부평구에 발송하였고,

이에 구에서는 방치폐기물현황 및 처리계획을 시에 통보하면서 실제 방치된 폐기물량이 그 동안 관리하여온 방치량(9,075톤)과 다르며, 2005.9.30.까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는바,

향후 실지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은 약 45,000톤으로써 처리비용이 6억원에 달함에도 계속해서 9천여톤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비 보조금을 3억원 지원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환경부에서 지원한 국비보조금 3억원은 당초 산정된 9천여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당시 실제 폐기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방치폐기물량 처리 대행업체 선정절차 부적정

2005.11. 구에서는 방치폐기물 처리예산 598,875천원(국비 50% 시·구비 각 25%)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제강슬래그 처리자격 및 설비와 조건을 갖춘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총액 턴키방식으로 민간대행 계약을 체결기로 방침을 받았으나(2005.11.12),

2005.11.18. 동 방침을 변경하여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3개 이상의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시설 또는 처리능력 부분에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에 구에서는 2005.11.18. 당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하였고, 공모내용에 참가자격은 수도권 지역의 관서에서 광재(제강슬래그) 재활용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및 석탄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사업장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차량을 충분히 보유한 업체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동 내용중 처리능력 판단기준에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시설 구비여부, 1일 평균 1,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차량 확보가능 여부, 당해 폐기물을 호안공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폐기물 전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제시하였으나,

공고기간(2005.11.18~11.25) 동안 △△△(서구 □□□동 1536)과 △△△(□□시 □□□면 □□□리 1638) 2개 업체만 공모에 응하였는바, 구에서는 당초 공모내용이나 자격조건 등을 모두 무시하고 2개 업체에 대한 자체 심사를 생략하고 2개 업체중 최저가 투찰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최저가를 투찰한 oo리싸이클링을 대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 자체 처리능력 판단기준에 따라 2개 업체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초 제시된 공고내용을 보면 공사내용이나 사업비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당시 응모한 2개 업체도 당초 제시한 참가자격이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당초 또는 수정·변경한 방침대로 공모한 업체가 3개 업체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마땅히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당초 방침대로 2개 업체에 대하여 자체 처리능력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처리능력을 판단·심사한 이후에 후속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3. 방치폐기물량 처리 “설계서” 등 미작성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각종 공사·용역 등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서·시방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함에도,

구에서는 당초 설계서나 시방서의 작성 등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한 채로 국·시비를 비롯하여 확보된 예산에 끼어 맞추는 식으로 총액가를 미리 정하여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에 건설폐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남은 예산 잔액(약 3400만원)을 모두 증액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당초부터 방치폐기물의 정확한 량이나 처리비용 등을 여러 가지 경로나 방법을 통하여 산출을 하고 그에 따라 보다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어야 하나, 위에 언급한 바대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동 건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년간 방치되어온 폐기물을 단기간 내에 처리한 점,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후 경매를 통하여 낙찰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추후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당 설정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점, 기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하여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오니 향후 방치폐기물 처리 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리업체 선정절차의 부적정, 설계서 미작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행정대집행으로 수년간 방치되어온 폐기물의 처리 후 처리비 징수를 위한 사전 조치 등 모범적인 선례라 판단되는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우수사례로 타 군·구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평구(□□□과)에서는 '05.1.14. △△△(□□□동 175-9)이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먼지 132.1PPM / 기준 100)함에 따라 '05.1.20. 당해 사업장에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는바,

동 행정처분 명령서에는 '05.1.31.까지 개선을 완료한 후 보고토록 명시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처분일시도 '05.1.17.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문서에는 개선완료 기한을 '04.2.1.로 명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일시나 개선기한을 각각 다르게 하여 처분을 하였고,

더욱이 동 사업자는 개선기한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계획서를 개선완료 기한이 경과한 '05.2.3.에야 제출하였음에도 조업정지나 고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동 사업자가 '05.2.19. 개선완료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05.2.21. 동 처분사항의 개선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행 완료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최종적으로 '05.3.16. 경고처분 및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하는 등 배출시설의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한편 △△△(□□□동 125-2)의 경우에는 당초(2004년 이전) 4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폐수방지시설을 사용하다가 '05.6월 수질항목(COD, 총질소 및 총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2차) 처분을 하였는바, 초과당시에는 2개업체만 사용을 하였고,

'06. 1월 다시 2개업체가 추가되어 총 4개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수질항목(TCE)이 초과하였는바, 새로이 초과된 TCE를 배출하는 업소는 신규로 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는 업체임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3차) 처분을 하였는바,

당시 담당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동 사항을 문의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행정처분을 관장하는 환경부에 질의할 것을 답변하였으나,

당해 처분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의 횟수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향후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형식적 운영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및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동 규정에 정하여진 바대로 기업체의 부담경감 및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우리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함에 있어서 통합지도·점검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부평구(□□□과)에서는 2005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6.28. △△△(주) 외 1개소에 대해 □□□과 1인과 □□□과 1인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개소에 대해서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3.31. △△△외 1개소를 관련부서 1인씩 2인이 점검을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1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통합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일부 사업장은 민간인 2인 참여).

3.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부적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267호. '05.12.16)에 따르면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 사항이 환경사범(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지침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접수 방법, 신고 사항의 처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평구(□□□과)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향후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행정처분 명령서와 관련 공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노력 하는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부서 및 민간인 참여하에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정공사장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 8] 및 [별표 8의2]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항타기, 굴삭기, 천공기 등 특정 건설기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공사 등(이하 “특정 공사”라 한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위 별표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 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이 정하는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당해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타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과)에서는 '05.7.28. 특정공사를 사전신고한 △△△(주)의 공사장(□□□동 685외 2필지)에서 '05.7.13.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소음 측정 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압쇄기, 굴삭기 등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처분을 하였는바,

특정공사장은 반드시 공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방음시설을 위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이후에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당시 흡음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직포로 포장형태로 쳐놓고 공사를 하였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처분을 하였고,

또한 '05.7.19. 특정장비(압쇄기, 굴삭기)를 사용하는 철거공정이 완료되었다는 이행완료보고에 대하여 철거공정이 완료된 것과 방음벽을 보강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이행보고서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05.9.27. 동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굴삭기, 천공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이 초과되어 '05.9.28.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동 사업장에서는 '05.10.3. 방음시설을 일부 보완(상층부)하여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소음 재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05.10.11. 이행완료보고서를 수리하였다.

계속해서, '05.10.13. 동 사업장에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었고, '05.10.14. 동 사업장에 대하여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는바, 동 위반 사항은 '05.9.28. 소음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고발조치나 조업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반복해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만 하였다.

계속해서 '05.10.18. 동 사업장에서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였고, 동일자로 사업장에서는 일부 방음벽만 보강한 것으로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부평구에서는 민원사항 처리 및 행정처분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05.10.19.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측정 결과 기준이 초과되었는바, 동 건은 위 '05.10.14.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완료보고를 수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으로서 고발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05.10.19.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05.10.24. 이동용 차음벽(컴프레사)을 설치한 것으로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05.10.27. 또 다시 민원발생으로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05.10.27.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만 하였다.

동 처분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05.11.1. 천공기 측면에 방음판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행완료보고를 하였고, '05.11.2.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이 초과되었는바,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만 하였으며,

동 처분사항에 대해 '05.11.4. 사업장에서 또 다시 컴프레사 주변에 차음판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05.10.20.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동측정을 의뢰한 결과 '05.11.3 진동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05.11.4. 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동 처분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05.11.4. 토사적치와 일부 방음판만 보강한 채로 다시 이행완료보고를 하였고, '05.11.21. 진동 재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이행완료보고서를 수리하였다.

아울러 '05.11.7. 소음초과 건에 대해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고, 사업장에서는 상층부에 일부 차음막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05.11.11. 재측정한 결과 기준초과되어 '05.11.14.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05.11.17. 항타기 주변에 차음벽을 일부 보강하여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고, '05.11.22. 또 다시 민원발생으로 소음측정을 하자 기준이 초과되어 '05.11.23. 또 다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05.11.28. 사업장에서는 1공정(오가 천공), 2공정(터파기) 중 1공정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행완료보고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05.12.2.과 '05.12.5.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지 확인하였으나, 날씨관계로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05.12.6.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05.12.7. 이행완료보고를 수리하였다.

계속하여 '06.1.10. 민원발생, 소음측정 기준초과, '06.1.11.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 '06.1.13. 암파쇄기(뿌레카)에 천 덮어씌운 것으로 이행완료보고,

'06.1.13. 민원제기, '06.1.16. 소음초과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처분, '06.1.20. 상층부 차음 지붕막 설치로 이행완료보고, '06.1.23. 소음 재측정 결과 기준이내, '06.1.24. 이행완료보고 수리,

'06.1.27. 소음 민원제기, 소음기준초과, '06.1.31.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06.2.3. 잔여 터파기 공사가 금주중 마무리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행완료보고, 동일자로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보완지시를 하였고, '06.2.7. 암반층 파쇄작업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이행완료 보고를 하자 공사장내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이행완료 보고를 수리한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05.7월부터 '06.2월까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기준초과로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만을 반복적으로 처분하였으며,

시공사측에서는 그 때마다 형식적으로 방음시설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강하여 완료보고를 하였음에도, 이행완료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한번에 종합적으로 개선·이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일부분이나마 이행완료 보고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분이나 고발조치 등의 보다 강력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 공사장을 관리함에 있어 극히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2005년~2006년 특정공사장의 소음·진동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 실태를 살펴본바, 이러한 사항은 비단 △△△(주)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며,

△△△(주), △△△(주), △△△(주), △△△(주), △△△(주) 등 대부분의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장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위반행위임에도 위와 같이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특정공사장의 방음시설이 매우 미흡하므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후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조치한 이후에 공사를 개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나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처분사항에 대하여도 이행완료보고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만을 반복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을 발생하도록 함은 물론,

소음·비산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미온하게 대처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향후 특정공사장이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시에는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가벼운 처분만을 지속·반복하여 행정행위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관련 공무원들에게 관계법규를 숙지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타 군·구의 사례나 형평성에 비추어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될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니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분야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593,398천원

[제 목]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의하면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종합합산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명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다’목에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주)△△△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0-7번지의 54개 필지 102,966㎡를 1983.11.23부터 1997.1.1에 걸쳐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0-54번지 일원 114,978㎡는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1989.5.23 결정고시된 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56호에 의거하여 2006.4.17자로 동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결정고시가 폐지되었음.

부평구청 □□□과에서는 (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0-7번지의 54개 필지 102,966㎡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0-342외 21개 필지 66,562㎡(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대하여 “쟁점 토지”일원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1988.5.23부터 2006.4.17까지 결정고시되어 있고, “쟁점 토지”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91-76 번지상에 구 oo송신소 건물 2,552.8㎡가 있으며, “쟁점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2004년도 이전에는 종합 토지세, 이하 같음)를 과세하였음.

하지만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0-54 일원 114,978㎡의 토지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있어 그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oo송신소 건물 2,552.8㎡이 존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91-76 번지 일원은 “쟁점 토지”와는 인접한 토지로서 이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 적용은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 판단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 토지”상에 2003년도에 가설건축물 1개동 90㎡, 2004년도에 가설건축물 3개동 353㎡, 2005년도에 가설건축물 4개동 542.52㎡, 2006년도에 가설건축물 3개동 299.52㎡가 각각 존치한 사실은 각 연도별 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해당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대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 100분의 3의 비율에 각각 미달하는 등 “쟁점 토지”의 제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평구청 □□□과에서는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에 따라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관련 토지분 재산세 444,521천원, 지방교육세 88,904천원, 농어촌특별세 59,973천원, 합계 593,398천원을 부족 과세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부과 누락된 재산세 등 593,398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36,043천원

[제 목]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제 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주)의 경우, 2002.4.22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247-1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6.8.31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460-3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9313.38㎡을 신축등기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재단법인 oo산업교육원의 경우, 2005.11.14자로 지방세법상 대도시외 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350-2에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지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24-4로 본점이 전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 등기는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에 해당하는 한편, 본점 전입 일 이전인 2002.2.28자로 취득 등기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124-4,18 소재 건물 1014.87㎡과 그 부속토지 494.2㎡는 대도시내 본점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2000.8.16자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376번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05.6.22자로 자동차관련시설 1,341㎡을 증축 등기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각각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등록세 193,478천원, 지방교육세 42,565천원, 합계 236,043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부과누락된 등록세 등 236,043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산 · 통 신 분 야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지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부평구 □□□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사용(운영)중인 음성급 통신회선과 주민자치센터 정보화교육장의 인터넷 품질향상을 위하여 통신회선 변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간망통신사업자인 (주)△△△와 (주)△△△의 ‘동사무소 통신망 변경 제안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평가항목(음성통화품질, 팩시밀리송수신품질, 인터넷품질)중 (주)△△△이 상대 업체보다 음성 및 팩시밀리송수신 품질이 우수하고 인터넷품질은 모두 우수하였으나, 품질평가전 제안서상의 기타약정인 이용요금 4년 약정을 이유로 제약사항이 없는 (주)△△△를 부적절하게 우선 협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평구 산하 22개 동사무소에 전용회선 설치를 (주)△△△에 ‘05.5.31 신청하여 ‘05.8.12 개통한 사실과, 당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이 없거나 장비(PC)노후로 폐쇄된 5개소(□□□동, □□□동, □□□동, □□□동, □□□동)중 4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전용회선 미개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음성급 통신회선 개통의 이유로 불필요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5,394,885원(내역참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회선번호	대상기관	총액(원)	지출(산출)내역	비고
01-169607-0334	□□□동	2,933,502	371,237(1개월)+225,645× 12개월	
01-169607-0337	□□□동	2,933,502	371,237(1개월)+225,645× 12개월	
01-169607-0342	□□□동	2,933,502	371,237(1개월)+225,645× 12개월	
01-169607-0344	□□□동	2,933,502	371,237(1개월)+225,645× 12개월	
01-169607-0347	□□□동	2,933,502	371,237(1개월)+225,645× 12개월	

[확인자 의견]

1. (주)△△△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 2005. 8.12일 완료된 음성 및 인터넷회선 품질개선을 위한 동사무소 통신회선 변경사업은
 - 2004. 9.11일 계획 수립한 친절한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1전화 번호 시행계획(문서번호 : □□□실-7938)추진과 병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 2005. 3.21일 음성 및 인터넷회선 품질개선을 위한 동사무소 통신회선 변경계획(□□□과-3126, 2005.3.21)을 수립후
 - 기간통신사업자인 (주)△△△와 (주)△△△에서 1차 제안서를 접수하여 2개 동사무소에서 1개월간의 통화품질 측정과 최종 수정제안서 접수(2005. 3.28~5.26)과정을 거쳐 (주)△△△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우리구청에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용 임대 통합망을 제공하기로 추진된 사업이며,
- 1차 제안서에서는 시험결과 및 장비사양에서 (주)△△△이 우수하였으나(음성은 통합되었으나 인터넷은 별도 회선으로 동사무소에 공급하도록 되어있음. 별첨1 참조), 최종 수정 제안서 접수시 (주)△△△에서 고가의 MSPP장비를 활용한 통합망(음성과 인터넷을 통합하여 수용. 별첨2 참조)을 제안하여 우리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의 취지와 가장 동일하고 장비의 특성과 성능상 월등한 (주)△△△에서 제출한 최종 제안서를 근거로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지출 부적정

○ 2004. 9.11일 계획 수립한 『친절한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1전화 번호 시행계획』(문서번호 : □□□실-7938)추진을 위하여

- 동사무소내 TD회선 6회선(동전화3, 팩스2, 동대본부1)을 13회선으로 증설

하여 수용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용회선 요금의 월 2,595천원의 증액이 발생함

○ 기존 방식으로 동사무소회선을 증설하여 사용시 지출예상요금

(2005년 5월 기준)

구분	①T/D기존	②T/D신규	③기타기관	④인터넷회선료	합 계
사용요금(원)	2,224,530	2,595,280	300,000 · 전용회선요금에서 지출	3,316,500 · 일반전화요금에서 지출	8,436,310

※ 인터넷회선 사용 동사무소 19개소(미사용동 : □□□동, □□□동)

① 기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T/D(음성급)회선 요금 (1동당 6회선, 총 126회선)
② 동사무소 전화 확대 보급을 위해 신규로 지출해야 하는 회선요금(1동당 7회선, 총 147회선)
③ 현장민원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등 유관기관용 회선요금 (평균 16회선 정도이며, 월별 변동있음)
④ 동사무소내 전산교육장, 인터넷방 등을 위한 인터넷회선 요금(201회선, ID사용료 16,500원/회선)

○ 2005. 8.12 사업완료후 정상적 요금 지출(음성 13회선사용)

(2005년 10월 기준)

구분	① T/D기존	*⑤ T/D신규	*⑥ 512K신규	③기타기관	④인터넷회선료	합계
사용요금(원)	2,224,530	261,525	4,797,567	300,000	0	7,583,622

⑤ 기간통신사업자와 요금계약상 증가된 T/D(음성급)회선 요금 (21개동, 총 15회선)
⑥ 동사무소 통합망 구축을 위한 512K급 회선요금 (21개동, 총 21회선)

- 현재 동사무소 사용회선에 따른 지출현황 비교표(음성 15회선사용)
 - 그동안 변동사항(2005. 8.12~현재)
 - □□□동 사무소 개청 : 2006. 4월(21개동→22개동)
 - 2006. 8월 동사무소내 1팀 신설에 따라 각 동당 전화번호 2회선 증설
→ 별도의 요금 증가 없이 통합망 추진사업에 의해 증설 사용
 - 사업추진 이전방식으로 운영시

구분	⑦T/D기준	*⑧T/D신규	③기타기관	④인터넷 회선료	합계
사용요금(원)	4,819,810	1,003,035	300,000	3,316,500	9,439,345

※ 인터넷회선 사용 동사무소 17개소

⑦ 위 ①+②(T/D급 기존 126회선+증설 147회선)의 사용요금
⑧ 삼산2동 사무소 개청에 따른 증설회선과 동사무소 팀 증설에 따른 증설회선 요금
- 삼산2동 T/D(음성급) 15회선+각 동당 2회선 증설(42회선)
(261,525원 + 741,510원 = 1,003,035원)

- 사업추진 후 현재 사용요금

구분	⑨T/D기준	⑥512K 기준	*⑩신규회선	③기타기관	④인터넷 회선료	합계
사용요금(원)	2,486,055	4,797,567	347,690	300,000	0	7,931,312

⑨ 위 ①+⑤ (T/D급 기존 126회선+증설 15회선)의 사용요금
⑩ 삼산2동 사무소 개청에 따른 증설회선과 동사무소 팀 증설에 따른 증설회선 요금
- 삼산2동 T/D 7회선(실사용 15회선)+삼산2동 512K 1회선+각 동당 2회선 증설(42회선)
(122,045원 + 225,645원 + 0원 = 347,690원)

※ 공공요금 세부 지출내역은 별첨 3참조

- 붙임 1. (주)△△△ 네트워크 구성방안 1부(별첨1).
2. (주)△△△ 망구성도 1부(별첨2)
3.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요금 내역(별첨3)

(별첨3)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요금 내역

(사용기간 : 2005. 9 ~ 2006. 9)

사용년도	사용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단위 : 원)	비 고
2005	9	14,999,122	8.12일자 21개동사무소 512k 개통
	10	7,283,622	
	11	7,283,622	
	12	7,283,622	
2006	1	7,283,622	
	2	7,283,622	
	3	7,283,622	
	4	7,283,622	
	5	8,345,080	4.7일자 □□□동 사무소 개통
	6	7,631,312	
	7	7,631,312	
	8	7,631,312	
	9	7,631,312	

1. 2005. 1월-2006. 9월 일반전화요금 및 전체 전용회선 요금은 {붙임 1} 참조
2. 위표의 동사무소 전용회선 월별 세부요금 내역은 {붙임 2} 참조

{붙임 1}

공공요금 사용현황(일반전화/전용회선)

(사용기간 : 2005. 1 ~ 2006. 9)

2005년				
월	일반전화	전용회선	합계	비 고
1	8,881,200	2,467,650	11,348,850	1동당 TD급 6 회선
2	8,661,350	2,467,650	11,129,000	
3	8,150,550	2,467,650	10,618,200	
4	8,889,860	2,467,650	11,357,510	
5	8,272,300	2,519,370	10,791,670	
6	9,307,420	2,830,820	12,138,240	
7	9,432,880	2,228,790	11,661,670	
8	7,646,960	5,635,860	13,282,820	
9	4,828,260	17,350,800	22,179,060	
10	5,029,890	8,183,560	13,213,450	1동당 TD급13회선
11	4,372,280	8,253,300	12,625,580	
12	4,872,000	8,183,560	13,055,560	
2006년				
월	일반전화	전용회선	합계	비 고
1	4,869,520	8,286,620	13,156,140	
2	5,179,880	8,113,820	13,293,700	
3	4,861,030	8,113,820	12,974,850	
4	5,306,700	8,113,820	13,420,520	
5	4,939,860	9,150,860	14,090,720	□□□동 증설
6	5,662,610	8,444,080	14,106,690	
7	5,008,570	8,444,080	13,452,650	
8	4,917,800	8,444,080	13,361,880	1동당 TD급 15회선
9	5,026,650	8,444,080	13,470,730	

1. 2005년 1월~7월 일반전화 사용요금내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회선 요금 3,015천원포함

2. 전용회선요금은 산하기관(보건소,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TD급 회선 포함

{붙임 2}

○ 2005. 9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내역

순서	동사무소명	512K 회선수	사용요금	T/D(2선식) 회선수	사용요금
1	□□□동	1	591,237	7	122,045
2	□□□동	1	591,237	7	122,045
3	□□□동	1	591,237	7	122,045
4	□□□동	1	591,237	7	122,045
5	□□□동	1	591,237	7	122,045
6	□□□동	1	591,237	7	122,045
7	□□□동	1	591,237	6	104,610
8	□□□동	1	591,237	6	104,610
9	□□□동	1	591,237	6	104,610
10	□□□동	1	591,237	6	104,610
11	□□□동	1	591,237	7	122,045
12	□□□동	1	591,237	7	122,045
13	□□□동	1	591,237	7	122,045
14	□□□동	1	591,237	7	122,045
15	□□□동	1	591,237	7	122,045
16	□□□동	0		0	-
17	□□□동	1	591,237	7	122,045
18	□□□동	1	591,237	7	122,045
19	□□□동	1	591,237	7	122,045
20	□□□동	1	591,237	7	122,045

21	□□□동	1	639,782	6	118,470
22	□□□동	1	639,782	6	118,470
소계		21	12,513,067	141	2,486,055
합계	14,999,122				

512K 설치비 200,000원. 회선료 337,489원. 부가세 53,748원. 회선료 591,237원. 8월12일개통

512K 설치비 200,000원. 회선료 381,612원. 부가세 58,170원. 회선료 639,782원. 8월12일개통

T/D 설치비 0원. 회선료 15,850원. 부가세 1,585원. 회선료 17,435원

T/D 설치비 0원. 회선료 17,950원. 부가세 1,795원. 회선료 19,745원

○ 2005. 10-12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내역

순서	동사무소명	512K 회선수	사용요금	T/D(2선식) 회선수	사용요금
1	□□□동	1	225,645	7	122,045
2	□□□동	1	225,645	7	122,045
3	□□□동	1	225,645	7	122,045
4	□□□동	1	225,645	7	122,045
5	□□□동	1	225,645	7	122,045
6	□□□동	1	225,645	7	122,045
7	□□□동	1	225,645	6	104,610
8	□□□동	1	225,645	6	104,610
9	□□□동	1	225,645	6	104,610
10	□□□동	1	225,645	6	104,610
11	□□□동	1	225,645	7	122,045
12	□□□동	1	225,645	7	122,045
13	□□□동	1	225,645	7	122,045
14	□□□동	1	225,645	7	122,045
15	□□□동	1	225,645	7	122,045
16	□□□동	0	-	0	-
17	□□□동	1	225,645	7	122,045
18	□□□동	1	225,645	7	122,045
19	□□□동	1	225,645	7	122,045
20	□□□동	1	225,645	7	122,045
21	□□□동	1	255,156	6	118,470
22	□□□동	1	255,156	6	118,470
소계		21	4,797,567	141	2,486,055
합계	7,283,622				

512K 설치비 0원 회선료 205,140원 부가세 20,514원 회선료 225,645원

512K 설치비 0원 회선료 231,960원 부가세 23,196원 회선료 255,156원

○ 2006. 1-4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내역

순서	동사무소명	512K 회선수	사용요금	T/D(2선식) 회선수	사용요금
1	□□□동	1	225,645	7	122,045
2	□□□동	1	225,645	7	122,045
3	□□□동	1	225,645	7	122,045
4	□□□동	1	225,645	7	122,045
5	□□□동	1	225,645	7	122,045
6	□□□동	1	225,645	7	122,045
7	□□□동	1	225,645	6	104,610
8	□□□동	1	225,645	6	104,610

9	□□□동	1	225,645	6	104,610
10	□□□동	1	225,645	6	104,610
11	□□□동	1	225,645	7	122,045
12	□□□동	1	225,645	7	122,045
13	□□□동	1	225,645	7	122,045
14	□□□동	1	225,645	7	122,045
15	□□□동	1	225,645	7	122,045
16	□□□동	0	-	0	-
17	□□□동	1	225,645	7	122,045
18	□□□동	1	225,645	7	122,045
19	□□□동	1	225,645	7	122,045
20	□□□동	1	225,645	7	122,045
21	□□□동	1	255,156	6	118,470
22	□□□동	1	255,156	6	118,470
소계		21	4,797,567	141	2,486,055
합계	7,283,622				

○ 2006. 5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내역

순서	동사무소명	512K 회선수	사용요금	T/D(2선식) 회선수	사용요금
1	□□□동	1	225,645	7	122,045
2	□□□동	1	225,645	7	122,045
3	□□□동	1	225,645	7	122,045
4	□□□동	1	225,645	7	122,045
5	□□□동	1	225,645	7	122,045
6	□□□동	1	225,645	7	122,045
7	□□□동	1	225,645	6	104,610
8	□□□동	1	225,645	6	104,610
9	□□□동	1	225,645	6	104,610
10	□□□동	1	225,645	6	104,610
11	□□□동	1	225,645	7	122,045
12	□□□동	1	225,645	7	122,045
13	□□□동	1	225,645	7	122,045
14	□□□동	1	225,645	7	122,045
15	□□□동	1	225,645	7	122,045
16	□□□동	1	626,177	7	435,281
17	□□□동	1	225,645	7	122,045
18	□□□동	1	225,645	7	122,045
19	□□□동	1	225,645	7	122,045
20	□□□동	1	225,645	7	122,045
21	□□□동	1	255,156	6	118,470
22	□□□동	1	255,156	6	118,470
소계		22	5,423,744	148	2,921,336
합계	8,345,080				

○ 삼산2동사무소 신규

512	장치비 200,000원	회선료 369,252원	부가세 56,925원	626,177원	4월 7일 개통
T/D	장치비 28,000원	회선료 28,530원	부가세 5,653원	62,183원	4월 7일 개통

○2006. 6-9월 동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내역

순서	동사무소명	512K 회선수	사용요금	T/D(2선식) 회선수	사용요금
1	□□□동	1	225,645	7	122,045
2	□□□동	1	225,645	7	122,045
3	□□□동	1	225,645	7	122,045
4	□□□동	1	225,645	7	122,045
5	□□□동	1	225,645	7	122,045
6	□□□동	1	225,645	7	122,045
7	□□□동	1	225,645	6	104,610
8	□□□동	1	225,645	6	104,610
9	□□□동	1	225,645	6	104,610
10	□□□동	1	225,645	6	104,610
11	□□□동	1	225,645	7	122,045
12	□□□동	1	225,645	7	122,045
13	□□□동	1	225,645	7	122,045
14	□□□동	1	225,645	7	122,045
15	□□□동	1	225,645	7	122,045
16	□□□동	1	225,645	7	122,045
17	□□□동	1	225,645	7	122,045
18	□□□동	1	225,645	7	122,045
19	□□□동	1	225,645	7	122,045
20	□□□동	1	225,645	7	122,045
21	□□□동	1	255,156	6	118,470
22	□□□동	1	255,156	6	118,470
소계		22	5,023,212	148	2,608,100
합계	7,631,312				

[처 분 요 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사업 준공지연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갱
신관련 업무추진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6조2항, 제18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3항 및 회계예규 제20조(검사), 21조(인수)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3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정보화일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실에서는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상 사업수행의 진행사항 파악 및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진행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용역사업 계약기간의 84%(101일)가 지난 시점인 중간보고서 “홈페이지 기획 및 개발”공정이 68%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홈페이지 준공이 늦어진 사실이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실에서는 외국어홈페이지 분기별 갱신을 위하여 2006년 본예산을 수립하였음에도 2006년 10월 현재 본 업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여 외국어홈페이지 전반 자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확인자 의견]

2006년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사업수행자가 사업완료시까지 부평구청에 상주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매일 오전, 오후 미팅을 실시하여 사업진도율을 체크·관리하였으며, 사업공정은 중간보고시 추가개발 사항이 많이 도출되어 다소 지연되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 미추진은 2007년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외국어홈페이지 통합사업(2006년10월 市와 군·구 팀장회의시 협의사항)과 중복되어 사업을 보류할 예정임.

[처 분 요 구]

○ 부평구에서는 향후, 정보화시스템 개발용역 추진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도입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용역사업 성과물과 준공기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따라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시고, 향후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외국어 홈페이지 사업을 감안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갱신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소홀 및 유지보수비 지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부평구 □□□과에서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를 무인으로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에 있어, 최선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나, 감사자료 요구기간인 '05. 9월부터 '06년 10월 현재까지 잦은 장애(매일 1건이상)와 장애조치 소홀(장애조치 기록없음)로 민원불편이 야기되었음.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매년 유지보수계약체결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출함에 있어, 2005~2006년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관련 '05.1.21, '05.1.18 및 '06.1.17일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05.1.1~12.31(12개월)과 2006.1.1~12.31(12개월)로 소급 계약하여 2005.1.1~1.20(20일), 2005.1.1~1.17(17일) 및 2006.1.1~1.17(16일)동안의 유지보수비(82,000원 / 295,640원 / 269,860원)를 초과 지출하였으며, 동 유지보수 기간의,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을 위한 유지보수 대상기기 선정시 계약서 상 동일기기(IKON-5020)로 유지보수 계약업체인 △△△(주)와 (주)△△△ 업체 모두에 계약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업무 전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부평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4항의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동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외부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시 계약부서에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적용하여 계약기간을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명) 및 주의(5)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5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제29조(단말기 보호)에 의거 개인용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담당 ○○○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용컴퓨터에 호적관련문서 및 주민등록자료(선거권이 없는자) 등의 중요 정보자료를 무단방치 하였고, □□□과 ○○○이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에 지방세 고액채납자 자료를 무단방치 하였으며, □□□과 ○○○이 관리하는 공익요원(○○○) · □□□과 과 ○○○가 관리하는 공익요원(○○○) · □□□과 ○○○ · □□□과 과 ○○○ · □□□과 ○○○이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에는 개인정보자료 등 붙임자료와 같이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단말기(개인용컴퓨터) 취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개인용컴퓨터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치를 설정하고,

○ 부득이 자료(파일, 디렉토리) 공유시 비밀번호 부여조치를 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분야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도로개설공사 잔여지 매수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잔여지의 판단)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잔여지가 1.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매수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정공부근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부평구 □□□동 264-5)이 2006. 3.15 신청한 잔여지 매수 청구건에 대하여 매수대상이 농지(지목:전)로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매수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현장조사 등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서만으로 토지보상금 10,32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물건의 소재 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등의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교통부 □□□과-59(2004.1.8)호로 무허가건물은 소유사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자는 실제소유자가 입증하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 실제소유자가 입증하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과-59(2004.1.8)】, 주민등

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의 지번이 다른 경우의 거주사실은 읍·면·동장의 확인이나 제세공과금의 납부증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토정58307-1367(1995. 9.16) 되어 있음.

그동안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과)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소유사실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2004.1.8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이 중단되어 ‘공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 지침’을 마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어떠한 방침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2005.1.6부터 2006.3.2까지 □□□동 767-1번지 부근 도로개설 외 2개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무허가건축물 점유자 ○○○외 2명에 대해 점유자가 입증하는 자료의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만으로 건물보상금 165,211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지와 거주지의 지번이 다른 ○○○(□□□동 751-18)외 6명에 대한 거주사실을 동장의 확인이나 제세공과금의 납부증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및 「거주사실인우보증서」(보증인 2명)만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거이전비 29,453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특히, ○○○(□□□동 267-4)과 ○○○(□□도 □□시 □□구 □□동 5090)은 주민등록주소와 실제거주 주소가 상이함에도 거주사실 확인 없이 주거이전비 10,207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부평구 □□□동 751 ○○○ 외 4명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거주사실을 인우보증하면서 자신의 전입일 이전에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을 보증해준 인우보증서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됨에도 확인절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공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자확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분야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노래연습장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현 황]

○ 붙임 : 노래연습장 법령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위법부당내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소를 행정처분 하여야 하며,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또한, 같은 법 제33조에 제3항에 의하여 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를 행정처분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부평구 □□□동 70-9소재)의 4개 업소에 대하여 최근 1년동안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가중처분함이 없이 최초 처분으로 행정처분하였으며,

△△△노래연습장(부평구 □□□동 546-69소재)의 5개 업소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주가 양도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여 가중처분하여야 함에도 최초 처분으로 행정처분하는 등

노래연습장 법령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위반 노래연습장에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전 처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경감되게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분야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4,887,2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돌출간판 허가에 따른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현 황

(단위:원)

구 분	건 수	미부과·징수 도로점·사용료	비고
계	126건	4,887,200	
2004년	64건	3,112,200	
2005년	62건	1,775,000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사용료 부과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돌출간판 광고물허가와 관련하여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하면서 당해연도분은 돌출간판 광고물 허가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부과하고, 다음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당해연도분을 광고물 허가일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도로점·사용료를 최초 부과하였고, 그 시점부터 도로점·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광고물 허가일부터 최초 부과일까지의 도로점·사용료 126건 4,887,200원에 대하여는 누락시킨 채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 분 요 구]

○ 부평구 □□□과에서는 돌출간판 광고물허가와 관련하여 미부과된 도로점·사용료 126건 4,887,200원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 장기간 체납자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장기간 체납자에 대한 실제 도로점·사용 여부 현황

(단위:원)

과 목	납부자	물건명	체납액(본세기준)		실제 점·사용여부
도로점사용료 (차량출입시설)	○○○	□□□동558-7	04년도분	2,110,000	부도로 인해 미거주
			05년도분	2,394,800	
			06년도분	2,734,850	
	○○○	□□□동192-6	04년도분	1,074,000	건축업자로 미거주
			05년도분	1,187,840	
			06년도분	1,278,000	
	○○○	□□□동199-2	04년도분	302,500	국외이주
			05년도분	324,500	

○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자 등은 그 지위를 승계하고,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현황의 도로점·사용료 체납자 ○○○외 2인은 최초 해당 물건지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사용하다가 개인사정(부도, 국외이주 등)으로 인해 도로는 현재 타인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임으로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사용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점용하는 자도 실제 점용자 명의로 도로점·사용료가 부과 되지 않기에 2년이상 계속하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실질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지 않고 있기에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이은성외 2인에 대하여는 허가기간 종료 여부, 권리·의무 양도 여부, 실제 거주여부 등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권리·의무자에게 도로점·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는데, 도로점·사용료를 매년 계속하여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납부자에 대한 현지실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처 분 요 구]

○ 부평구 □□□과에서는 도로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에 관련하여 장기간 체납된 납부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압류 미실시 현황(2004.12~2006.7.31현재)

구 분	건 수	금액 (천원)	비고
4 종	568	91,7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94	36,5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태료	79	18,1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143	16,350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252	20,740	

2. 내 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및 과태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자동차관리법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있어서, 과태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28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등 4종의 과태료 및 과징금 568건, 91,740천원에 대하여 독촉장 미발부(발부 지연 포함)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미실시 등 정당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부평구 □□□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 등 4종에 대한 독촉장 미발부 건 및 재산압류 미실시 건은 즉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 시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 산 관 리 분 야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8,742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허가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국유지 12건, 변상금 18,743,110원, 공유지 1건, 269,790원, 총 국·공유지 13건에 대한 변상금 18,742,900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로붙임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현황 1부.

[처 분 요 구]

미부과된 국·공유지 13건에 대한 변상금 18,742,900원에 대하여 부과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현황

(단위: m², 원)

소재지	재산구분	재산종류	지목	필지면적	무단점유면적	무단점유자	현재이용상태	부과기간	변상금	비고
□□동 12-205	토지	잡종채산	대	98.0	98.0	○○○	주거	2006.01.01 -2006.09.30	1,507,660	국유
□□동 33-6	토지	잡종채산	대	255.0	72.0	○○○	주거	2006.01.01 -2006.09.30	990,490	국유
□□동 34-1	토지	잡종채산	대	187.0	10.0	○○○	주거	2001.10.01 -2006.09.30	286,130	국유
□□동 34-1	토지	잡종채산	대	187.0	5.0	○○○	주거	2001.10.01 -2006.09.30	143,010	국유
□□동 34-1	토지	잡종채산	대	187.0	5.0	○○○	주거	2001.10.01 -2006.09.30	143,010	국유
□□동 722-71	토지	잡종채산	도로	99.0	99.0	○○○	기타	2006.01.01 -2006.09.30	2,611,870	국유
□□동 723-12	토지	잡종채산	대	63.0	63.0	○○○	주거	2006.01.01 -2006.09.30	984,020	국유
□□동 723-27	토지	잡종채산	대	79.0	79.0	○○○	주거	2006.01.01 -2006.09.30	1,233,940	국유
□□동 760-557	토지	잡종채산	대	149.0	10.0	○○○	주거	2006.01.01 -2006.09.30	35,780	국유
□□동 767-13	토지	잡종채산	전	509.0	34.0	○○○	주거	2006.01.01 -2006.09.30	360,740	국유
□□동 390-1	토지	잡종채산	대	961.0	347.4	○○○	공장	2001.01.01 -2006.09.30	10,102,420	국유
□□동 364-20	토지	잡종채산	전	89.0	20.0	○○○	주거	2001.10.01 -2006.09.30	74,040	국유
□□동 119-75	토지	잡종	대	20.0	9.0	○○○	건물점유	2001.01.01 -2006.09.30	267,790	공유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유재산관리대장 작성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장부상의 재산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재산의 증·감여부, 권리보전여부, 무단 점·사용여부, 무단형질변경 등 훼손여부에 중점을 두어 실태조사 결과를 국유재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평구 □□□과에서는 2006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점유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무단점유 등에 대한 적출사항을 국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감정평가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과의 1개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3년 이내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1년에서 3년까지 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동 관상복합건물에 따른 당해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출 할 수 있음에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수수료 2,873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임대에 따른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실외 6개부서(□□□과, □□□과, □□□과, □□□과, □□□과, □□□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정수승인 사전절차 미이행후 정수물품 예산 계상

[위법부당내용]

○ 현 황

해당 부서	예산편성 이후 정수승인 물품	정수 승인 미요구 (2006.10.27현재)	비 고
계	17대	6대	
□□□실	냉난방기 등 7대		
□□□과		문서세단기 1대	
□□□과	모사전송기 1대		
□□□과	비디오프로젝터 등 3대	전자복사기 1대	
□□□과	전자복사기 등 2대		
□□□과	전자복사기 1대		
□□□과	모사전송기 등 2대	중형컴퓨터 1대	
□□□과		금고 1대	
□□□국		전자복사기 1대	
□□□과		냉방기 1대	(정수요구는 하였으나 승인누락)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계상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데도, □□□실(예산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냉난방기 등 23대의 정수 배정이 아니된 물품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과, □□□과, □□□과, □□□과, □□□국에서는 종합감사기간(2006.10.27일) 현재까지도 기 구입된 문서세단기 등 5대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정수승인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정수물품 관리부서인 □□□과는 정수 승인없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추가 배정 등으로 정수승인을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수물품 운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부평구 □□□실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시 정수배정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여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라며, □□□과, □□□과, □□□과, □□□과, □□□과, □□□국에서는 정수물품 미승인 건에 대하여는 추가 배정 등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제거된 광고물의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현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정비	보관(공고)	반환	비고
수 량	525	722	722	103	619	창문이용제외

[위법부당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은 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가 쉽게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을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반환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제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관리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선진국형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고정광고물 정비방안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00길(0.9km), 00로(2.3km), 00동(0.2km) 등 3개 구역을 정비구간으로 지정하여 총1,486건(판류형 407, 돌출 111, 지주이용 7, 창문이용 961)에 대하여 2005.11. 2일 (주)△△△과 계약금액 ₩45,817,200에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여건 변동(□□□동 제외, 00로·000길 확대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하여 총1,769건(판류형 314, 돌출 124, 입체형 279, 지주이용 5, 창문이용 1,047)으로 물량조정 한 후 2005.12.29일에 ₩332,200이 감액된 ₩45,485,000으로 변경계약 체결 한 후 2006. 1.11일 설계물량대로 준공되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을 보관하여 이를 공고하고 매각 등의 절차를 이행하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관리자의 여부를 확인하여 반환하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12일 “‘05년도 행정대집행 기간 중 수거된 불법 고정광고물 정리 계획”에서 제거된 고정광고물 772건 중 103건 만에 대해서만 광고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에 게재하고 잔여 619건에 대해서는 보관공고 후 정당한 관리자의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하여 철거기간 중 소유자의 구두요청에 의하여 반환하여 줌으로써 당해 사업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후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및 행정조치를 이행하시어 동 사업의 효과가 저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옥외광고업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부적정

[현 황]

○ 2006.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 현황(부평구)

교육일시	대 상	수 료			불참	비 고
		합계	신규	보수		
2006. 4.18.	147	99	17	82	48	
2006. 9.19.	61	20	14	6	41	

[위법부당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은 신규사업자, 행정처분자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 및 별표5에서 연1회 위반자 25만원, 연2회 위반자 45만원, 연3회이상 위반자 10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여 2006년도의 경우 2006. 4.18. (신규/보수교육)과 2006. 9.19.(보충(신규/보수)교육)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1차 교육에 48명, 2차 교육에 41명의 교육 불참자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않는 등 옥외광고업 교육 미이수자에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과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 교육 불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교육불참 횟수를 기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건설분야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87,665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및 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하수도사용료체납현황, 지하수개발이용현황, 준공신고공문사본각1부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3.10.27)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 징수하게 되어있고, 그 부과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와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를 준용토록 명기되어 있음.

또한 동조례 21조(독촉장) 및 지방세법 제28조의2(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부평구 관할 하수도 사용가에 대한 체납상태를 확인하면,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2005년까지 체납건수 12,467건에 187,665천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체납액 관리가 소홀한 사실이 있음.

지하수 사용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가에 대하여는 상기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 대상을 상시 관리 하여야 함에도 관할 부평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되는 지하수 사용가는 899건 임에도 자체관리하는 지하수대장 부과 대상 세대는 농업용수 사용가 3건을 제외한 814건으로 85건이 과다 징구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을 정확히 확정하여 부과관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처리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자진납부 하여야 하며, 추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사전 납부안내가 필요한바, □□□과에서 허가나 신고 준공시 동 내용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 하였으나, 2006년 신고된 8건중 ○○○ 외2인에 대하여 동내용을 공문에 포함 시키지 않고 발송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하수사용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정확한 부과대상을 확정하여 부과에 만전을 도모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과·□□□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반출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그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의 경우에는 중간처리 업체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처리하고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소각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그 처리단가(운반비 제외)는 □□□과에서 작성한 2006년 설계기준을 참조할 때 재활용은 8,000원, 매립지반입은 27,060원, 소각은 250,000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해당란을 기재·확인 한 후 인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사감독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시
형상별 처리단가가 다른점을 감안하여 반출 상차시 현장에 반드시 입회하여
분리 반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기사 등에게 확인을 위임 하는 등 건설폐기물 반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시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결탁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을 증가시킨
사례도 발생 되었는데, 추후 시행되는 모든 폐기물처리용역의 건설폐기물 반출
시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입회하여 형상별 분리 및 반출관리에 만전을 도모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인천시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부 2,710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부평구청 도로치수과에 대하여 >

1. 현황

붙임 현황참조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원인지부담금등)에 의거 공공하수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제18조제④항(원인지부담금)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③항에 의거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까지 납부 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 하여야 한다.

위건 관련 □□□동388-1번지 oo교회의 경우 2002.05.31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 3월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코자 하여 동년 기준으로 교회1층 면적 376.60㎡가 오수량 6.026(㎥/일)로 산정되어 3,461,000원을 부과 납부 완료 하였으나 이후 설계변경되어 1층 전체면적이 390.2㎡로 증가되고 사용용도가 교회216㎡, 단독주택73.71㎡, 학원100.5㎡로 변경됨에 따라 오수량이 4.856(㎥/일)로 감소(참고:건물 사용용도에 따라 단위하수량이 변함)됨에 따라 동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2,710,000원과 비교하여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부조치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한 사실이 있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금액의 단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제①항 및②항에 의거 10원 미만이 금액에 대하여만 단수를 계산하지 아니 하여야 함에도 1,00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단수처리하여 부과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부적정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이와같은 사실의 발생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건축협의(실무종합심의회)시 하수도에 관한 사무는 실무급으로 위임전결 되어 검토 내용에 대한 상급자의 확인 부족도 그 원인이라 할 것임

[처 분 요 구]

- 과다 납부된 금액 2,710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납부자에게 조속히 환부 조치 및 납부에 만전을 도모하고, 검토체계 보완을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칙 강화 검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 물관리과에 대하여 >

하수도법 제32조제4항(원인지부담금등)에 의거 공공하수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제18조제④항(원인자부담금)의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③항에 의거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까지 납부 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가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토록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의 경우 허가일 이후에 설계변경 발생 빈도가 크므로 설계변경 대상물에 대하여는 그 적용 기준 일에 대한 명기가 없어 각 구청 담당자별로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 하는 등 세외수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와같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속히 관련지침 작성 및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실시

참고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는 위와같은 문제점을 감안 완공예정일 1개월 전으로 실시중에 있음.

[일련번호 : 5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 경계 아치조형물 설치공사 공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가. 공 사 명 : 부평구 시 경계 조형물 설치공사

나. 도 급 자 : (주)△△△ 21외 2개사

다. 사업개요 : 조형물 설치 1식

라. 계약금액 : 657백만원

마. 공사기간 : 2006.09.06~2007.01.26

2. 위법부당내용

우리시 관문 역할을 하는 시 경계지점에 시와 구의 상징성 및 예술성을 부각시키코자 미래지향적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시(□□□과)에서는 2005. 1.12 시 경계 조형물 설치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2005. 3.21 설치사업비를 부평구에 교부함에 따라 부평구에서는 『시 경계 아치조형물 현상공모 지침서』를 작성하여 2005. 8.23일 현상공모 하여 응모작품(총10건)을 접수하여 평가 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자 2005.11.28 2차 공모를 실시하여 2006. 1.27일 작품명 『새천년의 힘찬 응·비·나·래』를 당선작으로 선정 하였다.

이후 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8.22 설계 등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협상을 완료하고 2006. 8.31 계약을 체결, 2006. 9. 6 공사 착공에 이르러 현재 20%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모과정에서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3(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에 의거 건설공사를 기술공모에 의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예정시기(설계기간, 공사기간 명기)를 명기하여 공모자가 선정 될시는 동 일정에 의하여 용역 및 공사추진 하여야 하나 작성된 『시 경계 아치조형물 현상공모 지침서』에는 동 사항을 명기하지 않아 작품 선정된 자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지연하고 공사기간 또한 협상에 의하여 결정될수 없도록 하는 등 공모에 의한 업체 선정을 부실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추후 위와같은 용역 수행시는 관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토록 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 □□□과 ·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문화의거리 유지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가. 위 치 : 부평구 ooo앞~시장로타리간

나. 도로현황 : 길이 250m, 폭 15m

2. 위법부당내용

부평구 1번가로 할 수 있는 ooo~시장로타리간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 편익을 도모하고 주변의 재래시장 상권의 구심적역할과 그 파급효과로 부평의 중심상권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창출 등 부과적 효과를 높이 고자 시행된 부평구 『문화의거리조성공사』는 1997.10.2~1998. 1.20 공사 완공 되었다.

그러나 공사 준공시 위 거리에 설치된 구 관리 시설(바닥포장, 분수대, 가로등, 조경수, 조경시설)에 대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실시하지 않아 2005~2006년까지 언론에 유지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되었음에도 감사시 현장 확인결과 설치된 화강석평의자는 25개중 10개가 상태가 불량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설치된 평의자가 망실 방치되어 미관까지 해치고 있으며,

왕래가 많은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주는 안전기함 커버가 1개소 망실되고 12개소에서 접속볼트가 불량하여 커버의 탈락으로 인한 분실 및 안전

위험이 있으며, 임시 조치한 커버의 경우도 미관에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거리(보행자전용도로임)내 인근 상가에서 불법으로 주·정차를 실시하는 등 공원 전반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T/F팀 구성 등 유지관리를 위한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213백만원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도로내 맨홀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맨홀인상 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도로 지중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 설치가 필요하며 그 종류는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통신맨홀, 한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동 맨홀은 도로의 유지관리(덧씌우기) 및 차량 등에 의하여 인상(포장면에 맞추기 위해 들어올림) 및 파손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은 맨홀인상 및 보수공법은 크게 4가지(붙임 : 맨홀인상 공법별 비교표 참조)가 사용되는 있다. 동 4가지 공법중 MR-2공법, MS공법, SS-ET공법은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C-RING 공법은 상부 맨홀인상에 적용(포장 덧씌우기 구간)이 가능하며 위 공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그동안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맨홀보수 적용 공법을 살펴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MR-2공법을 적용하여 시공 하였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동 공법이 적용된 현장중 많은곳이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이 노후되어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시행한 곳으로 상기 고가의 공법 보다는 저가인 C-RING 공법을 적용 하여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와같이 맨홀 보

수공사시는 각 보수공법의 특성을 감안 현장 적용하되 경제성 또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에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서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 되도록 보수공법을 선정 하는 등 맨홀인상공사가 부적정히 시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맨홀인상 비용 징수 부적정

상기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시 소요되는 비용중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맨홀을 제외한 상수맨홀, 통신맨홀, 도시가스맨홀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관리주체에서 징수토록 협약되어 있고 징수의 간소화를 위하여 당해년도 시행분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여 세입 완료 처리하여야 하나 2005~2006년간 시행된 맨홀인상공사에서 미부과 통보한 것이 10건, 부과예고 통보 하였으나 미납된 것이 12건으로 합계 22건에 213 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미 징수 하는 등 징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하자관리 조치 부적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하자검사 지정된 공무원은 준공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 1년에 2회에 걸쳐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감사시 현장 확인결과 2005. 4.22~2005. 5.20까지 시행된 『□□□동사무소주변 도로재포장 맨홀인상 보수공사』가 전체맨홀 89개소중 35개소에서 파손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이에대한 하자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관리가 부실히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추후 시행되는 맨홀인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및 관련공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용 공법을 선정하고, 대행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 관리를 위하여 대장 작성 등을 통한 부과에 만전을 도모하며, 포장면이 파손된 맨홀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조치 실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1,969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설계변경 조치 및 준공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가. 공 사 명 : □□□동 oo연립부근 배수개선공사

나. 도 급 자 : (주)△△△ 대표 ○○○

다. 사업개요 : 펌프장 1개소, 관로설치 1식

라. 계약금액 : 158백만원

마. 공사기간 : 2006.01.06~2006.04.21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12)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위 공사는 당초 설계시 펌프장, 밸브실, 맨홀의 구조물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거푸집은 가격이 저렴한 유로폼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하였으며, 시공 또한 유로폼으로 시공 되었음으로 실투입된 거푸집으로 정산 설계변경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하였으며, 설계에 반영된 맨홀진입 사다리가 13개에서 3개로 감소 시공 되었고 H-PILE 근입을 위한 케이싱튜브가 현장 여건상 불필요하여 미 시공 되었음에도 이를 감액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또한 설계에

반영된 프리임코팅(MC-1)의 경우 관련 표준시방서 변경에 따라 RSC-3로 (MC-1보다 저렴) 시공 함으로서 3건 합계 1,969천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급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다하게 준공 지급된 1,969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회수 조치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관내 준설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하수도 준설공사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시공후 사후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검측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을 비치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과에서 시행된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 관로에 쌓여있는 퇴적토 높이를 산출하고 관로 전체에 대한 물량을 가정하여 준설물량을 산정할 뿐만 아니라 준설토의 수분량, 토질상태, 관로내부 상태에 따라 물량의 변동성이 큰 공사이다. 또한 준설작업의 순서를 살펴보면 준설차량의 현장투입→준설 실시→준설토 임시투기장에 적치의 공정으로 모든 준설이 완료되면 투기장에 적치되어 있던 준설토를 준설토재활용 업체에 반출하고 반출된 계근물량에 따라 준설량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위와같은 작업공정에 있어 단계별 우려 사항은 준설차량의 현장 반입시 차량내 준설토를 이미 적치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여 준설차량에 준설토를 혼입하는 행위 등 물량 증가를 위한 악용 소지가 충분한 공사이다. 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은 당초 공사발주시 설계된 물량이 예측 설계로서 공사시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함은 물론 위와같은 악용 소지를 감안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감독 하여야 함에도 업무과다를 사유로 공사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추후 시행되는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는 위와같은 우려점을 감안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공문 참조

2. 위법부당내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 등)에 의하면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7개소와 기타시설 11개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되,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여기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라 함은 동법시행령제7조에 의거 토목·건축·건설 안전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기사2급의 자격을 가진자중 당해분야 3년이상 근무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 기관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2005년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 위의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 예방을 위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추후 시행되는 정기안전점검시에는 관련 자격을 갖춘자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자는 조속한 교육 이수 실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공사 준공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붙임 감사 현장조사 확인서 참조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의하면 하수관거 시설 또는 정비공사 완료 후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CCTV 및 육안조사 결과는 Data Base화 하여 정비 전·후의 비교·판단이 가능하고 향후 유지·관리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붙임 공사의 경우 위와같은 일련의 검사를 설계에 미반영 하였음은 물론 준공시 구청자체 보유하고 있는 CCTV검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서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에 별도의 예산 수반이 불가피하게 하는 등 공사관리가 부적정하게 추진된 사실이 있으며,

□□□동 임대주공아파트부근 하수도정비공사 외2건에서 맨홀부적정 시공 및 관접합불량, 연결관 돌출 등 부적정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 됨.

[처 분 요 구]

- 추후 시행되는 하수도 공사시는 관련 규정에 규정된 항목을 설계에 반영 및 자체 보유한 cctv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 시공에 만전을 도모하고 부적정하게 시공된 불입 현장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조치 실시
-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정계1, 훈계3

[제 목]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지구 내 중복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초래
[위법부당내용]

부평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 3.16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하여 2005. 4.27 정비지구 결정을 위한 계획수립용역(용역사 △△△, 대표이사 ○○○)을 계약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 2005. 6. 7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확대해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자 2005.11. 8 사업지구계획을 확대보고(사업면적 : 118,000m² →192,000m²)하고 같은 해 11.10 설계변경 시행하였음.

그리고 2006. 1.20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4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당실무부서로 통보(□□□과-417)한 사실 또한 있음. 따라서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도시관리법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도시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사업지구 내는 물론 근접된 지역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은 예산낭비우려가 있으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일 경우에는

타절 준공 등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평구(□□□과)에서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포함된 소로3-19호선 도로(폭원4m, 연장60m)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가 침수해소목적으로 2003. 5.20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인천부평구고시 제 2003-14호)한 후 2005. 3.18 도로개설공사를 계약 체결[도급사 △△△(주) 사업비 47,322천원]하였으며, 같은 해 3.29 건물철거공사(사업비 9,785천원)도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세입자 이주가 지연되자 2005. 4.30 도로개설공사(건물철거포함)를 중지하여 약11개월 이 지난 2006. 3.23 공사 재개한 후 2006. 5.15 건물철거공사와 2006. 5.25 도로개설공사를 각각 준공 하였음.

소3-19호선 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계획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내로 포함되었으나 당초부터 도로는 지구경계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주거환경정비계획구역결정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될 수 있는 예견이 있었으므로 근접된 지역에서의 도로개설사업을 시행 할 시에는 신중하게 검토 하였어야 했는데도 “침수해소민원”이라는 사유를 들어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장기화 될 것을 가정하고 자의적으로 판단 해석 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적절하지 못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음.

이 과정에서 부평구(□□□과)에서는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미 도로개설공사 이전부터(2005년 상반기)정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2006. 1.20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6. 3. 7 시청(□□□과)으로 정비계획지정고시를 요청하였으며, 부평구(□□□과)에서는 사업자지정(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으므로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 주무부서인 □□□과에서 2006. 1.24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까지도 하였는데 무시한 채 아무런 방침이나 계획수립(타절, 사업축소 등)도 없이 도로개설공사를

재개하여 준공처리 하였음.

특히 2006. 5.11 설계변경 한 내용을 보면 당초 도로설계 폭원은 도시계획 상 4m 였으나 지역주민들로 부터 도로확장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에서 구두약속 하고 도시계획변경절차 선행도 없이 도로폭원을 6m로 확장하는 등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로개설사업으로 소요된 57,107천원상당 사업예산이 낭비되도록 초래한 사실이 있음.

아울러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주무부서인 □□□과에서 구두로 도로개설 주변에 공영주차장건설을 요구하자 부평구(□□□과)에서는 2005. 9.26 「주택가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계획」을 수립(대상필지 : oo동314-4외 1번지)하여 2005.12.13 주차장 부지를 매입(토지매입비 : 502,932천원)하였고 2006. 2.22 주차장(토목)건설[사업비 41,202천원, 도급사 △△△(주)]과 같은 해 3. 7 주차장(전기)건설(사업비 : 6,930천원) 및 2006. 2.22 주차장건설폐기물처리용역[사업비 16,272천원, 도급사 (주)△△△]을 추진하는 등 도로개설과 같이 부적정하게 주차장건설사업을 추진하여 64,404천원 상당의 사업예산 또한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자(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정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에는 확정된 선행 사업구간에서의 중복 건설로 인한 사업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도로 및 주차장건설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국공유지는 무상귀속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 사업시행지정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기 투자된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실이 최소화되도록 대책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oo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oo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4. 5.22 완료하여 인천시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2004. 8.27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예산 미 확보와 토지일괄보상 등의 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공원을 좀더 나은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6. 4.25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사업예산 확보 및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아 시설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을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평구에서 시행한 oo근린공원조성공사의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5. 과업의 내용 2)항에서 실시설계는 예산범위 내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는 oo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보고서를 참조」 한다고 명시하고 1단계 설계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설계용역사인 (주)△△

△에 구두 지시하여 2006. 4.20 용역사로부터 oo근린공원에 대한 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아 2006. 8.25 공사 착수하여 현재 20%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간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3조 일반적 손해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부분 납품된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20조, 21조, 22조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006. 4.20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침이나 계획 수립도 하지 않고 기성검사도 하지 않은 채 부분 납품된 설계 도서를 인정하여 oo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하는 등 설계용역 부분성과물 기성검사 소홀과 시설공사를 부적정하게 발주 계약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차분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즉시 기성준공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과, □□□과, □□□과,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배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별첨1,2)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평구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 준공한 “부평녹지조성공사”외 17건의 사업을 보면 학·경력자일 경우에는 소정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및 유사경력분야에서 3년 이상의 현장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경력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전력기술관리법 7년)의 현장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경력이 미달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사실이 있으며,

“oo동 신청사리모델링 전기공사” 외 30건의 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기술관리위탁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간별 세부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해당실무 경력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자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전력협회에서 발급한 인정기술자격 취득 사실로만 인정하여 현장대리인을 부적정하게 배치한 사실이 있음.

또한 1인의 현장대리인을 2개의 현장에 배치 할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평녹지조성공사”와 “학교공원화사업(□□□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을 동일인으로 중복배치하고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건설기술자를 부적정하게 배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방법, 도급금액, 현장기술인 현황 등을 기재한 건설공사 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평구에서는 2004년도 □□□동 산15~4번지일원 산사태 예방공사의 5건, 2005년도 □□□3동 청사인테리어공사 외 12건, 206년도 학교공원화사업 외 4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금액, 계약방법,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처에 전자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분야

[일련번호 : 6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허가 취소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위 치	건축주	용 도	규 모 (지하/지상)	연면적 (㎡)	허가일 (신고일)	비 고
□□□동 510-8	○○○	제1종 근린 생활시설	0/1	320.93 (증축 6)	2004.03.12	
□□□동 396-10	○○○	제 1 종 근 름 생활시설	0/1	426.39 (증축33.61)	2004.05.24	
□□□동 179-42	○○○ 외 1인	제 2 종 근 름 생활시설	0/5	689.79	2005.07.15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제8항 규정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평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 510-8번지의 2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일로부터 최소 3월에서 최장 1년 7월이 경과하도록 착공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 등 미착공된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에서는 미착공된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취소 절차를 즉시 이행하시고 앞으로는 건축관계법령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 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개공지 유지관리 단속 소홀

[위법부당내용]

위 치	건축주	용 도	연면적 (㎡)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공개공지 면적(㎡)	위법사항
□□□동 182-10	○○○	근 린 생 활 시 설 및 업무시설(오 피스텔 160호)	9,596.43	2002.01.29 2003.05.06	62.16	무단용도변경(주 차장사용), 화강 석 의자 8개 제 거, 교목 2그루 훼손

「건축법」 제6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긴의자·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및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 대지 및 건축설비가 제2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동 182-10번지 △△△에 설치된 공개공지에 위법사항(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화강석 의자 8개 제거, 교목 2그루 훼손)이 발생되었으나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건축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공개공지를 훼손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반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현장 조치소홀

[위법부당내용]

위 치	건축주	용 도	연면적 (㎡)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위법사항
□□□동 671-12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751.34	2006.06.30	2006.08.02	건축허가표지 판 미설치
□□□동 542-36	○○○	단독주택	115.46	2006.10.12	2006.10.16	건축허가표지 판 미설치

「건축법」 제19조의2(건축시공)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규정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같은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같은법 제80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처리된 □□□동 671-12번지의 1건의 건축공사 현장의 경우 건축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중에 있음에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통일된 건축허가표지판을 제작하여 착공신고 처리시 건축주에게 제공하시기를 바라며, 미설치된 건축현장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준공인가전 사전입주 조치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업명 :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 : 부평구 □□□동 199-24번지
- 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2개동, 170세대
- 사업주체 :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주)△△△ 대표이사 ○○○
- 시공자 : (주)△△△ 대표이사 ○○○
- 사업계획승인일 : 2003.04.04.(2003-주택건설사업-2)
- 착공신고일 : 2004.02.09.
- 위법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규정위반
 - 사전입주일 : 2006.09.16일부터
 - 사전입주세대 : 46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준공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제86조(벌칙)제2호 규정에 의하면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감독)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평구에서는 □□□동 199-24번지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없이 2006.09.1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70세대 중 46세대가 사전입주하여 사용중에 있음에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에서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시고 조속히 준공인가 신청토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위 치	사업주체	사업승인일/ 착공신고일	대지면적 (㎡)	용도	규모	위법사항
□□□동 119-1번지외 52필지	△△△임 광지역주 택조합, △△△(주)	2006.05.26 2006.10.16	15,060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1층 지상10~1 5층 8개동 323세대	바닥면적 88.76㎡ 미산입, 건축면적 연면적 증가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등에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라목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처리한 □□□동 △△△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102동, 104동, 105동, 107동 1층 바닥면적을 산정하면서 벽과 지붕이 있어 공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주출입구 진입공간 동별 22.19제곱미터 합계 88.76제곱미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피로티로 인

정하여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연면적을 누락한 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에서는 누락된 바닥면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하여 san입토록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관계법령 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업 계획승인시 위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공사 품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사 업 명	위 치	착공일	연면적 (㎡)	지적사항	현공정
□□□동 청사 신축공사	□□□동 406-45번지	'06.07.05	1,007.32	외벽단열재 시공 부적정	구조체 공사완료 및 단열공사중

공사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지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 지방서등과 일치되지 않게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상기 신축공사장의 경우 외단열(복합기능 반사보온단열재)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될 벽체면의 타이, 철선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접착제, 못 등으로 고정하며, 가로, 세로 겹침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겹침부분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여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밀시공 되어야 하나 콘크리트 벽체면의 청소없이 타이를 이용하여 단열재를 고정함으로써 접합부 굴곡 및 공간이 발생되고 벽체에 밀착 고정되지 않았으며, 겹침부분에는 5센티미터 이상 겹치거나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이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시공중에 있어 시설공사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에서는 외단열(복합기능 반사보온단열재)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 단열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밀시공 하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내집주차장갓기사업 보조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설치위치	설치자	주차형태 (대수)	보조금 지원액	공사기간	위법사항	비 고
□□□동 112-66	○○○	대문철거 직각 주차 (5대)	3,623천 원	2005.2.20~ 4.30.	차로폭 2.1미터 부족, 3대 연접배치 및 2대는 차로 에 접하지 않음, 주차구 획선 너비 2.0미터, 길이 4.2미터로 부족	차로폭 최 소 2.5미 터, 직각 주차 너비 2.3 미 터 길이 5미 터
□□□동 63-39	○○○	대문개조 직각 주차 (2대)	2,900천 원	2005.2.20~ 4.30.	1993.02.11.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2대 설치된 대지상에 보조금지원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제6항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2(보조의 대상)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부평구 □□□과-10650(2005.04.04)호 2005년 내집주차장갓기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주차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주민이 대문 또는 담장을 철

고 주택내 인접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 폭 4미터이상(회전축 고려), 주차구획선(직각주차 2.3미터×5미터이상, 평행주차 2미터×6미터이상) 면적이상 해당주택에 주차장 신규 및 추가 설치하는 경우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설치비의 90%범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부평구에서 지원한 □□□동 112-66번지 ○○○의 경우 주차장내 차로 폭이 최소 2.5미터 이상되어야 하나 실측결과 2.1미터로 부족하며,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3대 배치하고, 나머지 2대는 차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연접주차가 불가능하며, 직각주차 형식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실측결과 너비 2.0미터 길이 4.2미터로 기준에 부적합한데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3,623,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동 63-39번지 ○○○의 경우 신규 및 추가 설치하는 주차장이 아닌 1993.02.11. 건축물 사용승인시 대지내에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 2대에 대하여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2,900,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에서는 주차장법 연찬을 통하여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대상지 선정시 주차공간 및 진입공간, 기존건축물의 주차장, 조경설치부분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지적분야

[일련번호 : 7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이동(지목변경, 토지합병) 신청 소홀

[위법부당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개설 등이 준공된 경우에는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적법 제2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사유(지목변경 및 토지합병)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평구 □□□과에서는 □□□동 82-146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준공 '04.11.1), □□□동 284-5번지 도로개설공사 (준공 '05.6.27), □□□동 161-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준공 '04.10.2) 등 3개 도로개설 구간의 도로준공에 따른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목변경과 토지합병신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도로개설 준공 현황

도로개설 공사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시행자	비고
□□□동 △△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	'04.4.6	'04.11.1	부평구청(□□□과)	
□□□동 △△초교옆 도로개설공사	'04.7.5	'04.10.2	“	
□□□동 284-5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05.3.25	'05.6.27	“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인·허가준공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15일 이내에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고

○ 2004. 10월 이후 도로개설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을 하여 토지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보증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05.12.7 법률 제7710호)의 시행으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중개업자는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평구 □□□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인 부평구 □□□동 562-8번지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가0000-0000) 및 부평구 □□□동 453-1 △△타운 A 상가동 000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 ○○○ 가0000-0000)에 대하여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업무보증기간 만료일이 지난 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제1항13호 규정에 의거 1월의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부동산업무보증 미이행 업체현황

등록번호	사무소명	성명	주소	업무보증 만료일
가0000-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	□□□동 562-8	2006-6-27
가0000-0000	△△공인중개사 사무소	○○○	□□□동 453-1 △△타운 A 상가동 000호	2006-9-21

[처분요구]

○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05.12.7 법률 제7710호)의 시행에 따른 업무보증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제1항13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의 행정처분 등의 행위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필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반영하고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는 것으로

○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 중 토지이용 현황은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특히,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는 내부적인 확인 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가 개설·준공된 경우에는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을 이용상황에 맞도록 도로(91)로 변경하여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주거나지 또는 주거기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이 있음.

○ 토지특성 조사 소홀 현황

토지소재지	준공일	토지특성 착오조사	
		토지특성조사	실제토지특성
□□□동 284-29	2005.06.24	주거기타(16)	91(도로)
□□□동 282-4	“	주거나지(15)	91(도로)
□□□동 282-7	“	주거나지(15)	91(도로)
□□□동 282-9	“	주거나지(15)	91(도로)

[처 분 요 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도로가 개설준공되어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토지특성을 변경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이를 재공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소홀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지적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지적측량 기준점표지의 설치기준에 의거 지적측량수행자가 설치한 지적도근점의 성과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관청은 법시행령 제44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제2항, 법 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하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공사에서 □□□동 62-1번지 일원에 설치한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2004.6.24자로 측량하고 2004.7.12자로 검사를 완료하였는 바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공보(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공보(구보)에 게재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기준점 자체도근점 설치현황]

구 분	설치점수	측량일자	검사일자	설치지역	고시일자
지적도근점	21	2004.6.24	2004.7.12	□□□동 62-1일원	미고시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지적측량성과 제시를 위하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지적기초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한 지적도근점성과는 공보(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 기준점성과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공사 인천광역시 부평·계양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위법부당내용]

○ 지적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 및 측판측량방법에 의거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9조 각항의 사항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5조 각항 규정에 의한 측량기하적을 표시한 결과도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공사 부평·계양구지사에서는 부평구 □□□동 251-1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소관청에 제출한 측량결과도에 측량 성과의 기하적누락, 분할경계점 표시누락, 측량기준점 미표시, 측판점 미기재 등, 지적법시행규칙 제49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5조 제 규정에 의거하여 측량성과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불비내역

종목	접수일	토지소재	측량일자	측량자	불비내역
토지분할	'05.08.03	□□□동 251-1	'05.08.04	○○○	거리 및 방위각 누락 측판점 미기재
토지분할	'05.07.15	□□□동 492-12	'05.07.20	○○○	분할경계점 표시누락 측량기준점간 거리누락
토지분할	'05.08.29	□□□동 100-29	'05.08.22	○○○	측판점 중복기재 분할경계점 표시누락
토지분할	'05.09.02	□□□동 768-45외	'05.09.07	○○○	분할경계점 표시누락 측량기하적 미표시

[처 분 요 구]

지적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 및 측판측량방법에 의거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량대상 토지의 측정점 위치설명도 작성, 측판점의 이동순서 기재 등 측량기하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경위의측량방법 및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지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거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어 법률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자]

토지소재	과징금 (원)	부과대상자		납부기간	압류여부
		성 명	주 소		
부평구 □□□동 175-38, 175-42 다세대주택 00호	54,247,560	○ ○ ○	남동구 □□□동 1037 △△아파트 000/0000	2006.7.26	미압류

○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2007. 5. 20까지 3차에 걸쳐 분납을 요청하여 1차로 1000만원을 2006.6.1자로 징수하였으나 과징금납부 완납전까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과징금을 부과 후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촉촉 후 그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하나 분납을 한다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 과징금의 완납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도근점성과표 미기재

[위법부당내용]

○ 토지의 분할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세부측량 하는 지적도근점이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 한 후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지적도근측량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함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2항

[지적측량기준점 좌표미기재 현황]

종목	접수일	토지소재	측량일자	측량자	지적도근점좌표 미기재
토지분할	'05.8.3	□□□동 251-1	'05.8.4	○○○	1344, 1345, 1346, 3075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적법시행규칙 제49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이때 지적기준점이 기지경계선과 부합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도근측량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를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도근점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이 접수되어 이를 수행하고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바, 지적기준점이 기지 경계선과 부합치 아니하는 경우 지적도근측량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 한 후 도근성과 관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